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과 개선방안 : 안산시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성 / 이현경 / 김경미

report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과 개선방안
: 안산시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과 개선방안 : 안산시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Housing Condition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Foreign Workers:
Focusing on the Ansan Industrial Complex Case

정기성 · 이현경 · 김경미

연구관리 2024-015호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건과 개선방안

: 안산시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지은이 정기성, 이현경, 김경미
발행인 김홍배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 소 (34047)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홈페이지 <http://lhri.lh.or.kr>

전화번호 042-866-8610
이메일 jkseong@lh.or.kr

이 출판물은 우리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검토한 기초자료로서 공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진

이현경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경미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진미운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성진욱 SH 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부장

류승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팀장

자문위원 (가나다순)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 경희대학교 교수

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실장

임재빈 충남대학교 교수

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요약 Summary

■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파악 및 안산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문제를 면밀히 진단,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과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을 돌파, 2023년 기준 약 250만의 외국인 주민들이 체류(총 인구의 4% 수준)
- 주거권 측면과 지역 경제·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
 - *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전체 도시 인구의 12.9% 이상(약 9만 4천명)이 외국인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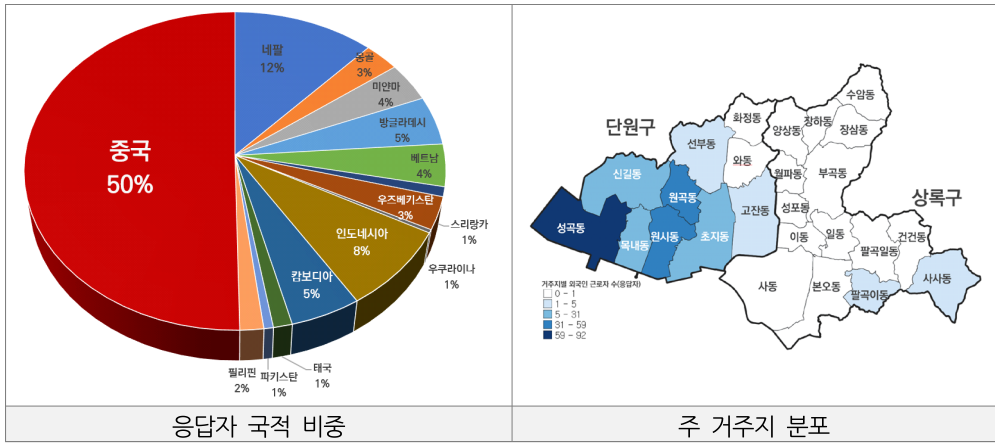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관련한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조사 및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주거실태 조사 수행

[표 1]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안산시 내 산업단지(반월/시화)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표본 규모	302명
조사 방법	개별면접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5.6%p
조사 내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경, 생활 및 고용환경, 주거 여건, 정책 요구도
조사 기간	2023년 8월 14일 ~ 9월 15일

■ 연구 결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 주거욕구의 희생을 감수

(기본정보)응답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50%)인 가운데 네팔(12%), 인도네시아(8%), 캄보디아(5%) 순으로 구성되며, 주 거주 지역으로 단원구 성곡동(산업단지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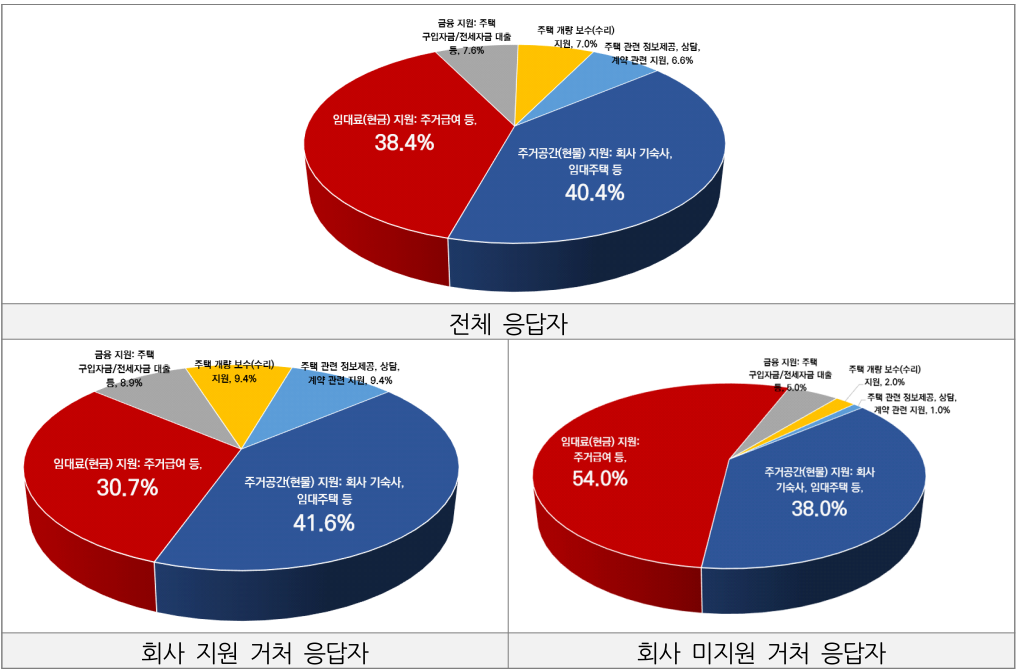
[그림 1]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응답자 기본 정보

- 고용허가제도 비자인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비중이 53.6%, 4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회사에서 거처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66.9%로 가장 높음 (주거여건 특성)경제적인 이유가 주거 선택에 핵심 요인이며, 다소 열악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렴한 가격에 만족하며 사는 모습
- 회사 제공 거처는 집세를 아낄 수 있으며, 비록 주거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 있음
- 주거환경(쾌적성·위생·침수 재해위험)에 다소 불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현 거처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모습

[표 2] 주거비 부담과 거주 인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1) 돈을 더 내더라도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40	20	162	80
2) 현재 집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계속 거주할 것이다	124	61	78	39

- (정책적 요구)응답자의 93%는 집 구할 때 상담 등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으며, 대부분 소속된 사업체에 의존하는 모습
-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전체 응답자와 회사 지원 거처 응답자의 경우, 회사 기숙사 및 임대주택 등 현물지원이 40%로 가장 높음
 - 반면, 회사 미지원 응답자의 경우 임대료 등 현금 지원이 54%로 큰 비중



[그림 2]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

- 95% 이상이 LH 공공임대주택을 알지 못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36.4%는 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회사 지원을 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60%)
- 반면, 회사지원거처 응답자의 경우 입주의향이 24.8%로 상대적으로 낮음

■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 제시

안산시는 포용적 시민의식, 지역 상생, 상호문화주의를 전제로 상호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권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및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안산시에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조례 및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
-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와 안산시 등 지자체 차원의 법률 및 조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LH는 「공공주택특별법」 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상 외국인에 대한 직접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자체의 행·재정 및 법률적 지원 하에 간접지원에 대한 논의 가능

- 따라서 사업체, 지자체 및 LH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주거지원 방안 모색을 고려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은 안산시가 강조하는 목표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정책을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

- 안산시는 2020년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최초로
가입하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고용·주거·문화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들 간의 상호관계성과 서로에 대한 이해 및 포용을 중시하며,
단순히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를 파악
하고 그들의 주거 수요와 제도적 상황을 검토하여 주거지원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로 그 중요
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외국인주민과
근로자들에 대한 포용적 논의를 시작할 때임
- 외국인 근로자를 ‘인력’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인간’으로 여기고, 그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그들의 ‘주거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상생과 화합의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라보고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야 할 것임

주제어

외국인 근로자, 안산시, 산업단지, 주거실태, 주거지원 방안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 방법	13
4. 연구의 틀 및 기대효과	14

제2장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안산시 현황 17

1.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17
1.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17
1.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및 생활 여건	24
1. 3.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28
2.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단지 특성	29
2. 1.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현황	29
2. 2. 안산시 산업단지 현황	31
3.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주거권	33
3. 1.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적 의무와 권리	33
3. 2.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와 주거권	35
4. 소결	41

제3장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조사 43

1. 설문 조사 개요	43
1. 1. 조사 목적 및 방향	43
1. 2. 조사 설계	43
1. 3. 응답자 특성	44

2. 주요 주거이슈별 분석 결과	47
2. 1. 한국 생활 및 고용 환경	47
2. 2. 주거 여건과 실태	56
2. 3. 주거 만족도와 주거 인식	70
2. 4. 정책 요구	81
3. 소결 및 시사점	88
제4장 주요 사례와 주거지원 방안	91
1.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에 관한 사례	91
1. 1. 주거공간 지원 관련 사례	91
1. 2.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법률 사례	96
2.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	98
제5장 결론 및 제언	103
참고문헌	107
부록	109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19
[표 2-2] 체류외국인 연도별·국적별 현황	20
[표 2-3] 체류외국인 연도별·국적별 현황	21
[표 2-4] 경기도 외국인 거주 현황 및 외국인 거주 비중	22
[표 2-5] 외국인 고용지표	24
[표 2-6]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24
[표 2-7]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분포	25
[표 2-8]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25
[표 2-9] 외국인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25
[표 2-10]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기업의 규모	26
[표 2-11]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지역	26
[표 2-12]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	26
[표 2-13]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27
[표 2-14] 외국인 근로자의 가구원 수	27
[표 2-15] 외국인 근로자의 거쳐	27
[표 2-16] 외국인 근로자의 가구원 수	28
[표 2-17] 안산시 외국인 현황	29
[표 2-18] 고용허가제 도입인원	30
[표 2-19] 반월·시화단지 입주기업 분포	31
[표 2-20] 전국 국가산업단지 현황	32
[표 2-21]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개별 법령상 권리 및 의무 규정	34
[표 2-22]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개별 법령상 권리 및 의무 규정	40
[표 3-1] 설문 응답자 특성	44
[표 3-2] 설문조사 표본 설계	44
[표 3-3] 응답자 특성	46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의 틀 및 흐름도	15
[그림 2-1] 외국인 통계 작성기준 차이	18
[그림 2-2]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19
[그림 2-3]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23
[그림 2-4] 등록 외국인 비자 현황	23
[그림 2-5] 외국인 근로자 활용여부와 사유	28
[그림 2-6]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제도	36
[그림 2-7]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4대 사회보험 제도	37
[그림 2-8]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39
[그림 3-1]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응답자 국적 비중	45
[그림 3-2]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응답자 주 거주지 분포	45
[그림 3-3] 한국 입국 목적,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9
[그림 3-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건 및 만족도	50
[그림 3-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건 및 만족도	50
[그림 3-6] 외국인 근로자 거주 동거인 여부	56
[그림 3-7] 거주 주택 유형	57
[그림 3-8] 주택이 아닌 거처 유형 비중	58
[그림 3-9] 거처의 입지	61
[그림 3-10] 거처 마련 방법	62
[그림 3-11] 회사 미지원 응답자 점유형태	64
[그림 3-12] 회사 미지원 전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정도	66
[그림 3-13] 회사 미지원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정도	66
[그림 3-14] 회사 지원 숙소 거주자의 주거비 월급 차감 여부	67
[그림 3-15] 거주하는 집의 상태	68
[그림 3-16]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71

[표 3-4] 전반적인 한국 생활 만족도	49
[표 3-5] 응답자 특성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건 및 만족도	54
[표 3-6] 전반적인 현재 회사 만족도	55
[표 3-7] 동거인 있는 응답자의 동거인 정보	56
[표 3-8] 거처 유형	58
[표 3-9] 응답 특성별 주택이 아닌 거처 유형 비중	59
[표 3-10] 응답 특성별 거주지 위치	60
[표 3-11] 응답자 특성별 거처의 입지	61
[표 3-12] 응답자 특성별 거처 마련 방법	63
[표 3-13] 응답자 특성별 회사 미지원 응답자 점유형태	65
[표 3-14] 주택 특성별 만족도	72
[표 3-15] 전체 주거 만족도	73
[표 3-16] 경제적 측면의 주거인식 결과	75
[표 3-17] 응답자 특성별 거주지 관련 어려운 점	76
[표 3-18] 돈을 더 내더라도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응답 결과	77
[표 3-19] 집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주거비 아끼기 위해 계속 거주할 것이다 응답결과	78
[표 3-20] 응답 특성별 이웃과 지역커뮤니티 사회적 수준	80
[표 3-21] 응답 특성별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1순위)	84
[표 3-22] 응답자 특성별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리커트 5점)	85
[표 3-23] 응답자 특성별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8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018년 이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돌파하여 현재 약 250만 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국내 총 인구의 4%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23; 정동재 외, 2022).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33.5%로 약 72만 명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는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안산시의 인구 중 12.9% 이상이 외국인 주민들로 구성되어 약 9만 4천 명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안산시청, 2023). 이 중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월 및 시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그들의 삶과 주거환경은 정책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력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용노동부, 2020; 엄진영, 2020).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안산시 등 산업계 현장에서 이들의 빈자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 시기와 겹쳐 이들의 불안정한 주거 상황이 외국인 근로자 체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져 인력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 및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심미승·박지현, 2021; 최영미, 2020; Bachtiar et al., 2015).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주거권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이수연, 2022; Chieko, 2012; Seol, 2012). 2020년 경기도 내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속행씨’ 사건은 사회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와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인 사건이었다. 그 이후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강화되는 노력이 있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문제는 현재도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선순위와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

[그림 3-17] 전체, 회사 지원 거쳐 별 주거 만족도	74
[그림 3-18] 거주지 관련 어려운 점	74
[그림 3-19] 이웃과의 사회적 수준	79
[그림 3-20] 인종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80
[그림 3-21] 이사를 위한 주거상담 여부, 상담 받은 장소	81
[그림 3-22]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81
[그림 3-23] 회사 지원 유무별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83
[그림 3-24]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87
[그림 3-25]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90
[그림 4-1]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미지들	92
[그림 4-2] 전북 익산시 희망하우스 사업 전과 후	93
[그림 4-3] 전북 익산시 희망하우스 사업 구조. 저자 작성	94
[그림 4-4] 화성시 LH 중소기업 기숙사 공급 모델	95
[그림 4-5] 관악구 난민 공공임대주택 대상 판례 이미지	96
[그림 4-6] 경기도 및 안산시 조례 중 주거지원 관련 조항	100
[그림 4-7] 외국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여론 관련 기사 이미지	101
[그림 4-8] 상호문화도시 안산 이미지	102
[그림 4-9]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	102

과 실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주거권 측면과 지역 경제·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과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들의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안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반월 시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주거, 고용의 여건과 주거 수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기존 지원 사례들을 고려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안산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과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국인 근로자 가구의 인구, 사회, 경제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상황과 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두 번째 목표는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주요한 주거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면 설문조사, 산업단지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 문제를 도출하고 분석한다.

세 번째 목표는 주요 사례를 기반으로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주거여건을 고려하고 관련 사례들의 핵심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주거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을 논의한다. 이는 상호문화주의적 포용성의 기반을 전제로 하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가늠해본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통계청, MDIS,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외국인 근로자 실태, 안산시 외국인 인구 변화와 산업단지 내 근로하는 외국인 인구의 특성을 인구·사회·경제 등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외국인 인구와 근로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거환경과 관련한 기본적 현황을 파악한다.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주거실태와 주거 수요 및 주거문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한다. 주요 설문 부문은 기본항목, 한국생활, 고용환경, 주거실태, 주거만족도 및 주거인식, 주거분야 어려움, 정책 수요 등이다.

< 설문조사 세부내용 >

- 설문 대상: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가구 총 300명 대상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안산시
 - 시간적 범위: 2023.06~ 2021.07
- 주요 설문 내용:
 - 기본적인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적 정보(출신 국가·지역·성별·연령·소득 등)
 - 주거실태 조사(주택 유형, 면적, 점유형태 등)
 - 주거만족도 및 주거인식(주거비 부담 및 전·월세 환경변화 등)
 - 주거분야 어려움(퇴거 위험 및 주거환경 어려움 등)
 - 희망 개선 사항 및 정책적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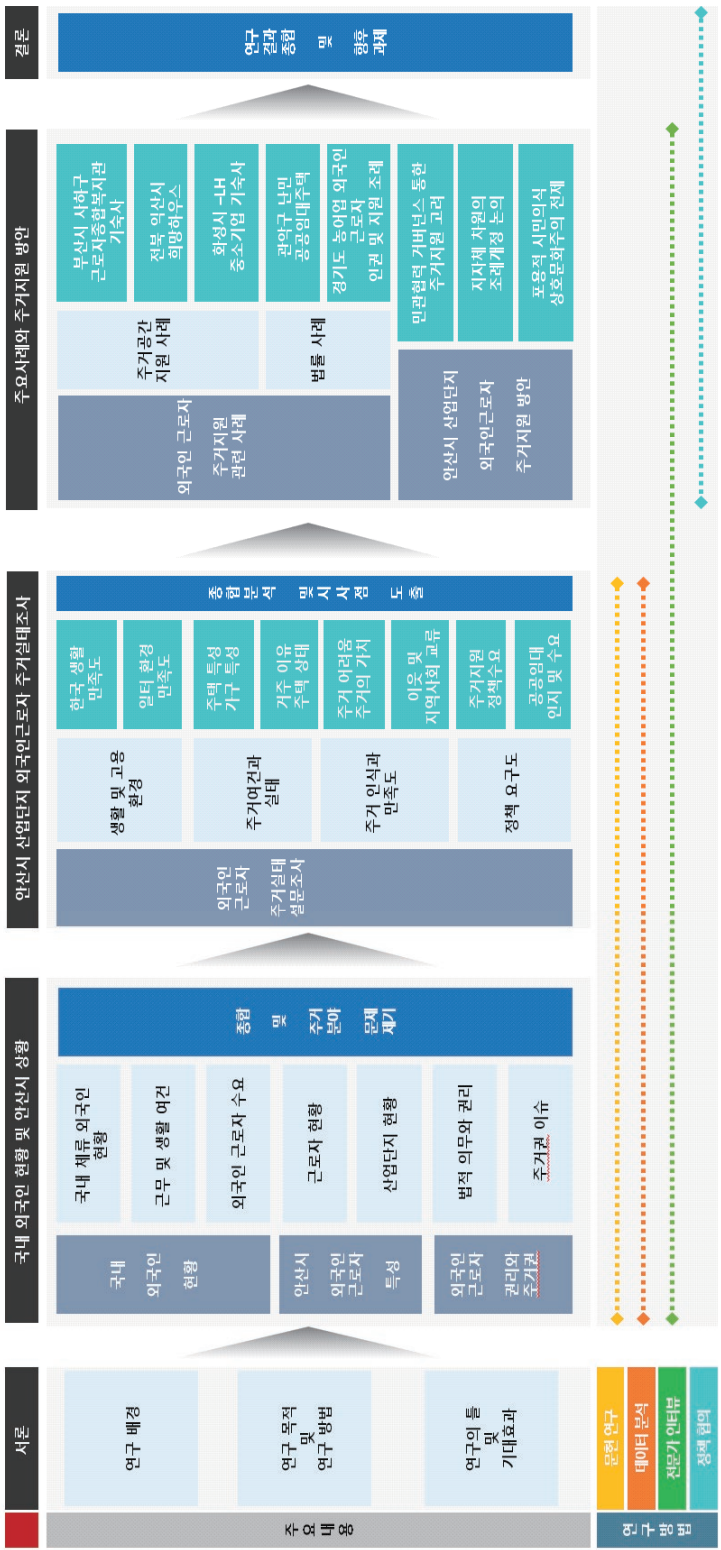
세 번째로 전문가 면담(Interview) 조사를 실시한다.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단지·외국인 근로자·주거복지 분야 학계, 민간 비영리 부문, 외국인 인권지원 전문가, 안산시 유관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심층 면담조사(In-depth Interview)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수행한다.

네 번째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관련한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자체의 외국인 주거 지원 사례와 법률적 판례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지원 조례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간담회, 공사 실무자 간담회, 실용화 협의회 등 관련자 의견 수렴을 거친다. 향후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거이슈를 공론화, 대토론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한 내용을 연구 보고서에 반영한다.

4. 연구의 틀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틀과 흐름은 다음과 같다(그림 1-1).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2장에서는 국내 외국인 인구, 사회, 경제 현황과 법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기초 특성과 주거 이슈에 대해서 정리한다. 3장에서는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과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한다. 설문조사는 안산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3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기본문항, 생활 및 고용환경, 주거 여건, 정책 요구도와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는 한국생활 및 고용 환경, 주거 여건과 실태, 주거 인식과 만족도, 정책적 요구 4개 이슈로 재분류하여 분석 및 정리되었다. 4장에서는 외국인 주거지원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주민 200만 명 시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을 확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림 1-1] 연구의 틀 및 흐름도

제2장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안산시 현황

1.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1.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출입국·외국인관서인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있으며, 내·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에 공표한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자료(인구주택총조사)는 각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거주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1월에 공표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발표하는 외국인 관련 통계는 작성 기준일자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준 또한 상이하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과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체류만료일이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한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은 기준일 전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자(귀화한 자는 포함하나 국적 회복자는 제외),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인 통계의 작성대상 범위가 더 넓고, 단기 체류외국인도 국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목적에 따라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통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체류외국인¹⁾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을 의미하며,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등록외국인이란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의미한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요용어 설명 요약 정리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거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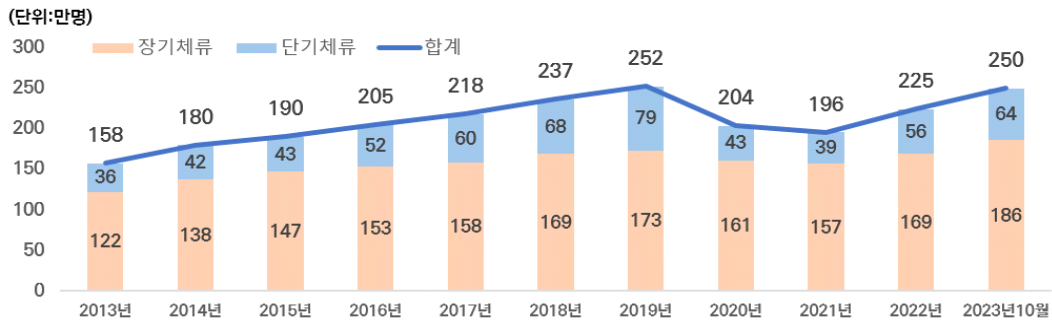
구 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since 1975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 since 2006
목 적	내·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현황 파악, 관련 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	각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거주현황 파악, 관련 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
기준일 / 공표	매년 12. 31. / 다음연도 7월	매년 11. 1. / 다음연도 11월
작성방법	출입국·외국인관서 → 법무부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 행안부
분류기준	<div>▪ 출입국자(국민·외국인 포함)</div> <div>▪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단기체류외국인 포함)</div> <div>▪ 결혼이민자</div> <div>▪ 국적취득·이탈·상실자</div> <div>▪ 외국국적동포</div> <div>▪ 불법체류외국인 등</div>	<div>▪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div> <div>▪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div> <div>▪ 외국인주민 자녀</div>
대상기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기준일 전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주요개념	<div>▪ 체류외국인 * 장·단기 체류자격(A-1~T-1)별 외국인</div> <div>등 록 외 국 인 D-1~10, E-1~E-7, E-9~E-10, F-1~F3, F-5, F-6, G-1, H-1, H-2 등 장기체류 자격</div> <div>취업자격 체류외국인 C-4, E-1~E-7, E-9~E-10, H2</div> <div>결 혼 이 민 자 F-2-1, F-5-2, F-6-1, F-6-2, F-6-3</div> <div>유 학 생 D-2(D-2-1~D-2-8), D-4(D-4-1, D-4-7)</div> <div>외 국 국 적 동 포 F-4, H-2, 한국계 중국인, 고려인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div> <div>불법체류외국인 장기(등록외국인및 거소신고외국인) 및 단기체류자 중 체류기간 경과자</div> <div>▪ 국적취득자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div>	<div>▪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div> <div>외국인근로자 E-1~E-7, E-9~E-10</div> <div>결 혼 이 민 자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div> <div>유 학 생 D-2(D-2-1~D-2-8포함), D-4(D-4-1, D-4-7)</div> <div>외국국적동포 F-4 중 국내 거소신고자</div> <div>기 타 외 국 인 그 외 체류자격</div> <div>※ 각 유형 내 체류기간 초과자 포함</div> <div>※ 출국 중인 체류외국인 미포함</div> <div>▪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귀화한 자 (국적회복자 제외)</div> <div>▪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div>
관련부서	법무부 이민정보과(02-2110-4094)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4)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요용어 설명

[그림 2-1] 외국인 통계 작성기준 차이

2023년 10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2,496,092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1,331,547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527,152명, 단기체류외국인은 637,393명으로 나타난다. 2013년 158만명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은 2019년까지 252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196만명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코로나 이전 기간인 2019년도 대비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단기체류 외국인수는 코로나팬데믹 여파로 크게 감소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2023년 10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p.19

[그림 2-2]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표 2-1]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연도	총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계	등록	거소신고	
2013년	1,576,034	1,219,192	985,923	233,269	356,842
2014년	1,797,618	1,377,945	1,091,531	286,414	419,673
2015년	1,899,519	1,467,873	1,143,087	324,786	431,646
2016년	2,049,441	1,530,539	1,161,677	368,862	518,902
2017년	2,180,498	1,583,099	1,171,762	411,337	597,399
2018년	2,367,607	1,687,733	1,246,626	441,107	679,874
2019년	2,524,656	1,731,803	1,271,807	459,996	792,853
2020년	2,036,075	1,610,323	1,145,540	464,783	425,752
2021년	1,956,781	1,569,836	1,093,891	475,945	386,945
2022년	2,245,912	1,688,855	1,189,585	499,270	557,057
2023년10월	2,496,092	1,858,699	1,331,547	527,152	637,393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2023년 10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p.19.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92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36.9%)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28만명(11.1%), 태국 20만명(8.2%), 미국 18만명(7.1%), 우즈베키스탄 8.7만명(3.5%) 순으로 나타난다.

[표 2-2] 체류외국인 연도별 · 국적별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월
총 계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496,092
중국(한국계 포함)	1,101,782	894,906	840,193	849,804	920,025
(한국계)	(701,098)	(647,576)	(614,665)	(602,907)	(623,912)
베트남	224,518	211,243	208,740	235,007	277,517
태국	209,909	181,386	171,800	201,681	203,448
미국	156,982	145,580	140,672	156,562	176,602
우즈베키스탄	75,320	65,205	66,677	79,136	86,815
러시아(연방)	61,427	50,410	48,680	56,995	68,548
필리핀	62,398	49,800	46,871	57,452	67,523
네팔	42,781	39,743	36,903	47,865	61,648
인도네시아	48,854	36,858	34,188	50,841	58,027
캄보디아	47,565	41,405	41,525	49,240	56,163
몽골	48,185	42,511	37,012	53,038	54,312
일본	86,196	26,515	28,093	46,741	47,981
카자흐스탄	34,638	29,278	29,616	41,840	46,255
미얀마	29,294	26,412	26,096	33,275	40,382
(타이완)	42,767	19,444	18,554	25,417	31,550
캐나다	26,789	21,794	22,830	27,705	29,664
스리랑카	25,064	22,466	20,291	24,912	29,408
방글라데시	18,340	16,823	16,426	21,928	25,902
인도	12,929	10,892	11,542	14,419	16,714
파키스탄	13,990	12,842	12,410	14,460	16,083
말레이시아	14,790	5,470	5,053	9,528	14,131
호주	15,222	7,913	7,591	17,819	13,898
프랑스	5,980	3,835	4,217	7,231	12,068
기타	118,936	73,344	80,801	123,016	141,428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2023년 10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p.20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격별(비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F-4)가 53만명(21.3%)으로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으며, 비전문취업(E-9) 31만명(12.3%), 사증면제(B-1) 24만명(9.6%), 영주(F-5) 18만명(7.4%) 순으로 나타난다. 취업자격을 가진 체류외국인 수는 51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다.

[표 2-3] 체류외국인 연도별 · 국적별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월
총 계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496,092
취업자격 체류외국인1)	567,261	452,297	406,669	449,402	519,646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비중	22.5%	22.2%	20.8%	20.0%	20.8%
사증면제(B-1)	248,753	179,332	165,869	224,817	239,330
관광통과(B-2)	204,541	51,977	43,673	100,793	126,381
단기방문(C-3)	256,696	114,261	97,225	137,642	170,212
단기취업(C-4)	1,645	2,356	1,691	1,985	4,213
유 학(D-2)	118,254	101,810	111,178	134,062	155,960
기술연수(D-3)	1,964	1,634	1,654	1,719	1,843
일반연수(D-4)	63,691	52,952	53,870	65,204	71,752
종 교(D-6)	1,561	1,254	1,378	1,471	1,445
상사주재(D-7)	1,400	1,057	1,028	1,148	1,205
기업투자(D-8)	5,909	5,587	5,955	6,822	7,467
무역경영(D-9)	2,352	2,136	2,053	2,148	2,549
교 수(E-1)	2,187	2,053	2,017	2,012	1,931
회화지도(E-2)	13,910	12,621	13,403	14,251	14,058
연 구(E-3)	3,132	3,110	3,638	4,009	4,001
기술지도(E-4)	220	199	177	214	204
전문직업(E-5)	624	374	257	238	226
예술흥행(E-6)	3,549	3,011	3,285	3,989	4,714
특정활동(E-7)	21,314	19,534	20,675	24,083	38,008
계절근로(E-8)			383	4,767	19,732
비전문취업(E-9)	276,755	236,950	217,729	268,413	306,883
선원취업(E-10)	17,603	17,552	17,921	19,874	20,493
방문동거(F-1)	122,886	105,382	96,015	105,293	112,807
거 주(F-2)	43,671	43,666	42,367	44,561	52,437
동 반(F-3)	22,890	20,050	21,237	24,917	28,882
재외동포(F-4)	464,152	466,682	478,442	502,451	531,427
영 주(F-5)	153,291	160,947	168,118	176,107	183,725
결혼이민(F-6)	131,034	133,987	134,285	136,266	141,632
방문취업(H-2)	226,322	154,537	125,493	105,567	105,183
기 타	114,350	141,064	125,765	131,089	147,39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각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및 통계월보(저자 일부 수정)

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단기취업(C-4), E-1~E-10, 방문취업(H-2)

2022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경기도에 6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31개의 시군 기준으로 안산시에 8.6만명, 시흥시에 5.7만명, 화성시에 5.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곳은 안산시(12.1%), 포천시(10.7%), 시흥시(10.2%)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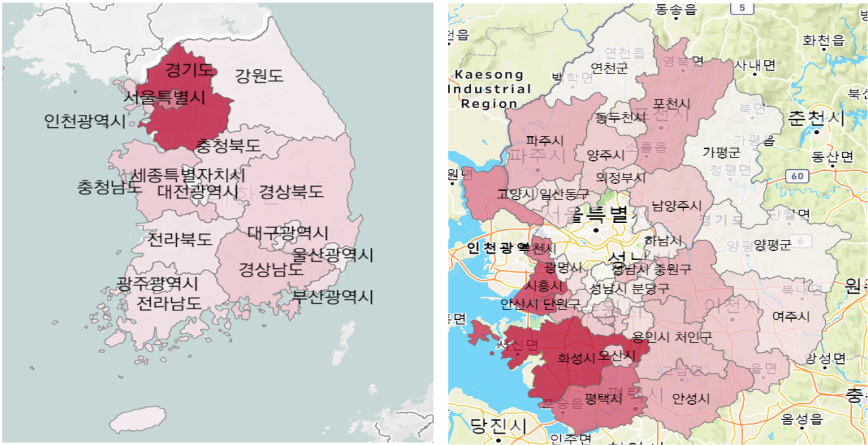
2023년 9월 말 기준 등록외국인은 131만명으로 50%이상이 경기도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에 41만명(31.5%)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 25만명(18.9%)이 거주한다. 경기도의 등록외국인은 안산시(5.2만명), 화성시(4.4만명), 시흥시(3.7만명)에 많은 밀도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4] 경기도 외국인 거주 현황 및 외국인 거주 비중

지역	총인구	외국인 수	외국인 거주 비중
경기도 합계	13,717,827	600,925	4.4%
수원시	1,216,349	56,241	4.6%
성남시	904,690	24,434	2.7%
의정부시	455,128	6,807	1.5%
안양시	540,789	10,383	1.9%
부천시	810,142	41,354	5.1%
광명시	284,031	5,785	2.0%
평택시	590,205	35,177	6.0%
동두천시	94,142	4,371	4.6%
안산시	715,088	86,487	12.1%
고양시	1,044,242	17,658	1.7%
과천시	73,406	404	0.6%
구리시	184,114	2,064	1.1%
남양주시	719,886	10,438	1.4%
오산시	242,596	16,746	6.9%
시흥시	557,663	56,693	10.2%
군포시	267,750	9,842	3.7%
의왕시	157,318	1,542	1.0%
하남시	315,203	3,553	1.1%
용인시	1,064,500	26,190	2.5%
파주시	490,765	16,084	3.3%
이천시	227,193	10,492	4.6%
안성시	208,619	20,220	9.7%
김포시	491,249	27,673	5.6%
화성시	931,472	56,733	6.1%
광주시	392,926	16,174	4.1%
양주시	242,995	9,994	4.1%
포천시	163,542	17,481	10.7%
여주시	113,831	4,921	4.3%
연천군	41,288	1,262	3.1%
가평군	59,755	1,473	2.5%
양평군	116,950	2,249	1.9%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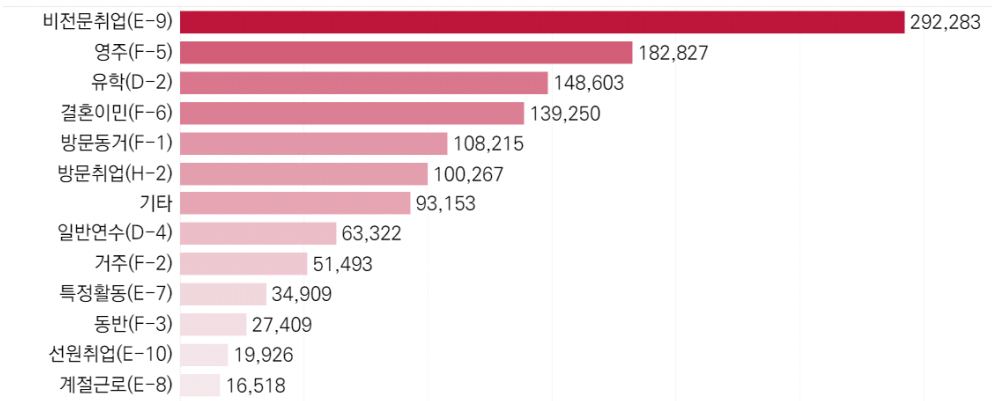
경기	419,029
서울	251,695
충남	83,564
경남	86,091
인천	79,528
경북	66,787
부산	48,580
충북	48,402
전남	47,682
전북	40,826
대구	32,868
광주	24,650
강원	25,264
대전	23,427
제주	24,585
울산	22,764
세종	5,805
등록외국인 합계	1,331,547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2023년 9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시각화

[그림 2-3]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등록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2023년 9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시각화

[그림 2-4] 등록 외국인 비자 현황

1.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및 생활 여건

2022년 5월 기준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88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7.6%이며, 취업자는 84.3만명으로 고용률은 64.8%, 실업률은 4.2%로 나타난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른 내국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9%, 고용률은 63%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표 2-5] 외국인 고용지표 (단위: 천명, %)

구분		상주 인구	경제 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1. 5.	1,331.8	909.6	855.3	54.3	422.2	68.3	64.2	6.0
	2022. 5.	1,301.9	879.9	843.0	36.8	422.1	67.6	64.8	4.2
	전년대비증감	-29.9	-29.7	-12.3	-17.5	-0.1	-0.7	0.6	-1.8
	증감률	-2.2	-3.3	-1.4	-32.2	0.0	-	-	-
경제활동 인구조사 ¹⁾	2021. 5.	45,049	28,698	27,550	1,148	16,351	63.7	61.2	4.0
	2022. 5.	45,245	29,374	28,485	889	15,871	64.9	63.0	3.0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1)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년 5월 고용동향(2022. 6.15. 공표, 통계청)에서 발췌(재인용)

외국인 취업자 중 재외동포 비율이 29.2%로 가장 높으며 고용허가제²⁾와 관련된 체류비자인 비전문취업(E-9)이 24.8%, 방문취업(H-2)이 8.5%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2-6]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비전문취업 (E-9)	방문 취업 (H-2)	전문 인력 (E-1~E-7)	유학생 (D-2, D-4-1-7)	재외 동포 (F-4)	영주 (F-5)	결혼 이민 (F-6)	기타
2021. 5.	855.3	216.0	93.7	39.4	34.1	236.8	89.4	64.3	81.7
2022. 5.	843.0	209.1	71.6	40.8	28.3	245.8	95.8	67.9	83.7
(구성비)	(100.0)	(24.8)	(8.5)	(4.8)	(3.4)	(29.2)	(11.4)	(8.1)	(9.9)
	남자	558.6	190.5	45.9	24.1	150.4	51.1	20.7	62.7
	여자	284.5	18.7	25.7	16.7	95.4	44.6	47.2	21.0
전년대비증감	-12.3	-6.9	-22.1	1.4	-5.8	9.0	6.4	3.6	2.0
증감률	-1.4	-3.2	-23.6	3.6	-17.0	3.8	7.2	5.6	2.4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 고용허가제는 내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의 비중이 33%로 가장 높으며, 15세~29세의 비중은 20.5%, 40~49세의 비중은 19.4%로 나타난다.

[표 2-7]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분포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21. 5.	855.3	189.4	283.4	163.0	149.2	70.3
2022. 5.	843.0	173.0	278.3	163.2	154.7	73.9
(구성비)	(100.0)	(20.5)	(33.0)	(19.4)	(18.4)	(8.8)
전년대비증감	-12.3	-16.4	-5.1	0.2	5.5	3.6
증감률	-1.4	-8.7	-1.8	0.1	3.7	5.1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제조업 비중이 43.9%로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광·제조업종에서 외국인들의 사회·경제적 기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021. 5.	855.3	61.0	370.4	102.1	161.6	20.7	139.6
2022. 5.	843.0	45.8	370.3	102.6	157.3	25.8	141.2
(구성비)	(100.0)	(5.4)	(43.9)	(12.2)	(18.7)	(3.1)	(16.7)
전년대비증감	-12.3	-15.2	-0.1	0.5	-4.3	5.1	1.6
증감률	-1.4	-24.9	0.0	0.5	-2.7	24.6	1.1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7.3%, 임시·일용근로자는 36.7%의 비중으로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9] 외국인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021. 5.	855.3	811.3	495.7	315.6	44.0	12.4	24.7	6.8
2022. 5.	843.0	792.7	483.1	309.6	50.3	15.4	27.8	7.1
(구성비)	(100.0)	(94.0)	(57.3)	(36.7)	(6.0)	(1.8)	(3.3)	(0.8)
전년대비증감	-12.3	-18.6	-12.6	-6.0	6.3	3.0	3.1	0.3
증감률	-1.4	-2.3	-2.5	-1.9	14.3	24.2	12.6	4.4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69.4%가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된다는 상황을 반증한다.

[표 2-10]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기업의 규모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4명 이하	5~9명	10~29명	30~49명	50~299명	300명 이상
2021. 5.	855.3	202.1	159.6	229.8	86.4	151.6	25.8
2022. 5.	843.0	184.3	159.8	240.0	85.2	148.5	25.2
(구성비)	(100.0)	(21.9)	(19.0)	(28.5)	(10.1)	(17.6)	(3.0)
전년대비증감	-12.3	-17.8	0.2	10.2	-1.2	-3.1	-0.6
증감률	-1.4	-8.8	0.1	4.4	-1.4	-2.0	-2.3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62.5%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체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표 2-11]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지역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전·세종 충남·충북	대구 경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제주
2021. 5.	855.3	146.1	49.1	330.0	86.7	106.3	55.1	55.8	26.0
2022. 5.	843.0	146.8	52.4	328.0	83.2	99.6	51.2	55.5	26.3
(구성비)	(100.0)	(17.4)	(6.2)	(38.9)	(9.9)	(11.8)	(6.1)	(6.6)	(3.1)
전년대비증감	-12.3	0.7	3.3	-2.0	-3.5	-6.7	-3.9	-0.3	0.3
증감률	-1.4	0.5	6.7	-0.6	-4.0	-6.3	-7.1	-0.5	1.2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0~300만원 미만(51.1%)이 가장 많으며,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30.1%)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2]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2021. 5.	811.3	36.0	174.2	423.7	177.4
2022. 5.	792.7	30.2	118.8	405.1	238.6
(구성비)	(100.0)	(3.8)	(15.0)	(51.1)	(30.1)
전년대비증감	-18.6	-5.8	-55.4	-18.6	61.2
증감률	-2.3	-16.1	-31.8	-4.4	34.5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79.2%), 보통(18.1%), 불만족(2.7%) 순으로 나타난다.

[표 2-13]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천명, %)

구분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20. 5.	(100.0)	(81.4)	(49.4)	(32.0)	(16.3)	(2.3)	(2.0)	(0.3)
2022. 5.	(100.0)	(79.2)	(44.4)	(34.8)	(18.1)	(2.7)	(2.4)	(0.4)
남자	(100.0)	(79.9)	(44.8)	(35.1)	(17.5)	(2.5)	(2.1)	(0.4)
여자	(100.0)	(78.3)	(43.9)	(34.4)	(18.7)	(3.0)	(2.7)	(0.3)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 근로자는 2인 가구(29.0%) 형태로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으로 나타난다.

[표 2-14] 외국인 근로자의 가구원 수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평균 가구원 수(명)
2021. 5.	1,331.8	(100.0)	(26.3)	(30.3)	(20.2)	(23.3)	2.6
2022. 5.	1,301.9	(100.0)	(28.7)	(29.0)	(20.4)	(21.9)	2.5
남자	717.3	(100.0)	(33.9)	(26.5)	(19.5)	(20.1)	2.5
여자	584.6	(100.0)	(22.5)	(32.2)	(21.4)	(24.0)	2.6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거처는 일반주택(59.6%)이 가장 많고, 점유형태는 전·월세(60.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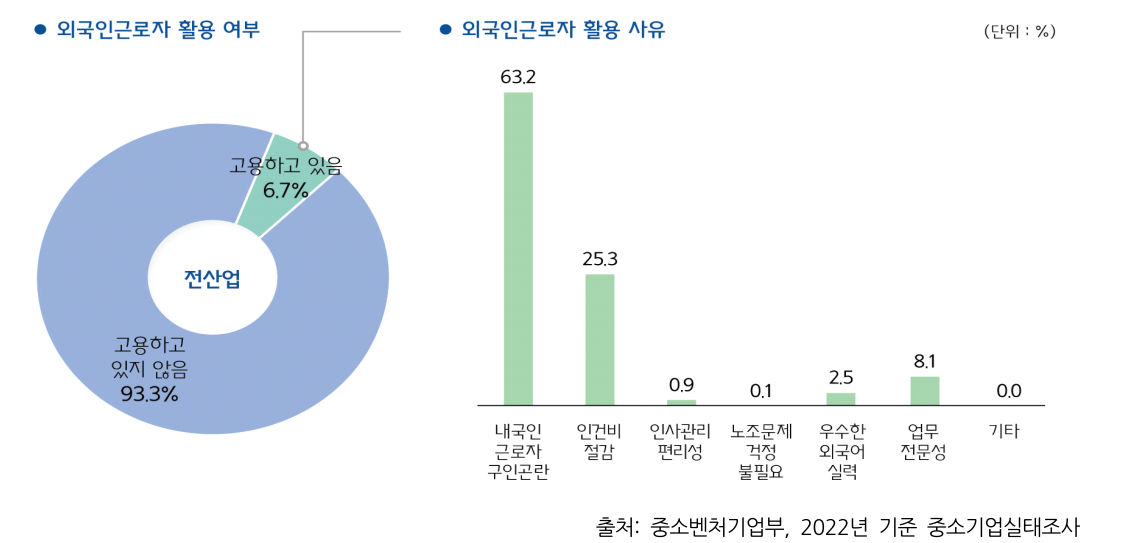
[표 2-15] 외국인 근로자의 거처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거처종류				점유형태		
			일반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자기 집	전·월세	무상
2021. 5.	1,331.8	(100.0)	(58.8)	(19.6)	(12.9)	(8.7)	(16.0)	(60.2)	(23.7)
2022. 5.	1,301.9	(100.0)	(59.6)	(19.8)	(11.7)	(8.8)	(16.9)	(60.9)	(22.2)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2).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1. 3.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20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³⁾ 6.7%의 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17.9%의 높은 비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요 사유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곤란’과 ‘인건비 절감’이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구인곤란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답이 82.9%로 나타났다.



[그림 2-5] 외국인 근로자 활용여부와 사유

최근 1년간 정부의 인력지원시책에 참여한 업체는 12.4%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된 시책으로 ‘인건비 보조제도’, ‘외국인력제도(고용허가제)’에 대한 응답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인력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외국인 근로자의 가구원 수 (단위: %)

구분	시책 활용	외국인력 제도						시책 미활용
		산업기능요원제도	외국인력제도	고용후채용연계제도	인건비보조제도	재직자직업훈련지원제도	고용환경개선제도	
전산업	12.4	6.1	40.9	2.3	50.0	10.7	4.2	87.6
제조업	19.2	15.5	60.5	3.8	32.9	7.2	10.8	80.8
서비스업	10.3	0.7	29.6	1.4	59.8	12.7	0.4	89.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3)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국가통계 승인번호 제 142001 호)

2.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단지 특성

2. 1.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 수와 거주 외국인 비중이 제일 높은 안산시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외국인 5.1만명(54.5%)과 외국국적의 동포 4.3만명(45.5%)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외국인 중에는 방문동거 외국인(12.1%)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11.9%)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인력지원을 위한 방문취업(H-2) 근로자(11.3%)와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5.6%)가 상당한 비중으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안산시에는 한국계중국인이 50.1%의 비중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우즈베키스탄, 한국계러시아인 순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표 2-17] 안산시 외국인 현황

체류자격	인구	비중	국적	인구	비중
등록외국인	51,576	54.5%	한국계중국인	47,410	50.1%
고용허가(E9)	5,270	5.6%	중국	10,653	11.2%
방문취업(H-2)	10,723	11.3%	우즈베키스탄	9,938	10.5%
결혼이민자	4,942	5.2%	한국계러시아인	7,598	8.0%
유학·연수	3,688	3.9%	카자흐스탄	3,719	3.9%
전문인력	786	0.8%	베트남	2,389	2.5%
난민	2,274	2.4%	러시아(연방)	1,455	1.5%
방문동거	11,495	12.1%	인도네시아	1,201	1.3%
영주	11,311	11.9%	필리핀	996	1.1%
기타	1,087	1.1%	네팔	906	1.0%
외국국적 동포	43,128	45.5%	우크라이나	834	0.9%
			몽골	701	0.7%

출처: 안산시 통계(2023), 2023년 10월말 외국인 등록 현황

고용허가제는 매년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규모에 맞춰 인력수급이 어려운 사업장에게 일정한 요건에 맞춰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70% 이상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리적 특성을 지닌다.

[표 2-18] 고용허가제 도입인원 (입국연도별)

연도별 구 분		총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 계		1,659	7	60	79	120	182	100	61	102	115	123
일반 고용 허가 제	소계	840	3	32	29	35	77	63	38	49	54	59
	제조업	697	3	31	28	31	67	55	32	40	46	49
	건설업	30	0	0	0	1	3	4	2	2	1	2
	농축산업	79	0	0	1	2	5	2	3	5	5	6
	서비스업	1	0	0	0	0	0	0	0	0	0	0
	어업	32	0	0	0	0	1	1	1	2	2	2
특례 고용 허가 제	소계	819	4	29	50	85	106	38	22	53	62	64
	제조업	388	0	0	9	25	34	18	13	27	37	42
	건설업	128	3	18	21	18	21	3	0	7	2	0
	농축산업	9	0	0	1	2	3	1	0	1	0	0
	서비스업	290	1	11	19	40	47	15	9	18	22	21
	어업	2	0	0	0	0	0	0	0	0	0	0
	분류불능	0	0	0	0	0	0	0	0	0	0	0
	해당없음	2	0	0	0	0	1	0	0	0	0	0
연도별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11	비중
총 계			149	99	91	86	81	82	18	24	91	
일반 고용 허가 제	소계		52	51	60	51	54	51	7	11	78	85.8%
	제조업		41	40	47	39	44	40	5	7	60	66.1%
	건설업		2	2	3	2	1	2	0	1	1	1.6%
	농축산업		6	6	7	7	6	6	1	2	11	11.6%
	서비스업		0	0	0	0	0	0	0	0	0	0.1%
	어업		2	3	3	3	3	4	0	1	6	6.4%
특례 고용 허가 제	소계		98	48	31	35	27	31	11	13	13	14.2%
	제조업		60	29	20	23	17	18	5	6	4	4.7%
	건설업		3	2	3	3	5	6	3	5	5	5.7%
	농축산업		0	0	0	0	0	0	0	0	0	0.1%
	서비스업		33	16	8	8	5	7	3	3	3	3.6%
	어업		0	0	0	0	0	0	0	0	0	0.0%
	분류불능		0	0	0	0	0	0	0	0	0	0.0%
	해당없음		0	0	0	0	0	0	0	0	0	0.0%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3) 외국인고용지원사업 통계자료('22.11월 기준)

2. 2. 안산시 산업단지 현황

안산시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큰 규모(입주기업 수 기준)를 가지고 있는 반월·시화 단지에 인접해 있다. 반월 국가산업단지는 서해안 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수도권 제조업 분산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1977년에 조성을 시작⁴⁾하였다. 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시흥과 화성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산업단지로, 반월국가산업단지의 확장 개념으로서 새로운 중소기업전문단지로 개발한 단지이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주로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인 미만의 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 2-19] 반월·시화단지 입주기업 분포(단위: 개수, %)

산업단지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반월	115	416	350	723	28	206
	1.3%	4.8%	4.0%	8.3%	0.3%	2.4%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3,140	3,116	285	126	252	8,757
	35.9%	35.6%	3.3%	1.4%	2.9%	100.0%
산업단지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시화	61	187	237	728	36	664
	0.5%	1.7%	2.1%	6.5%	0.3%	6.0%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비제조	총계
	6,683	1,804	407	156	186	11,149
	59.9%	16.2%	3.7%	1.4%	1.7%	100.0%
산업단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수					
	50인 미만기업	50인 이상~ 300인미만 기업	300인 이상기업	계		
반월	7,912	353	32	8,297		
	95.4%	4.3%	0.4%	100%		
시화	10,616	177	12	10,805		
	98.3%	1.6%	0.1%	100%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23)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23.9월 기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24만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기업체가 가장 많이 입주한 산업단지로 소규모 사업장이 주로 분포되어 있어 입주기업단위별 생산 실적이 낮게 나타난다. 23년 9월 한달 기준 반월·시화 단지의 입주기업단위별 생산 실적은 각각 3.5억원 2.8억원인 반면, 305개의 기업이 입주한 여수 단지의 생산실적은 249억원에 달한다.

4) 안산시 누리집, 디지털안산문화대전(반월국가산업단지). <http://www.grandculture.net/ansan/toc/GC02500989>

[표 2-20] 전국 국가산업단지 현황 ('23년 9월 한달 기준)

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실적	생산실적/ 입주기업단위	고용인원	생산실적/인원
	(단위:개)	(단위:억원)	(단위:억원)	(단위:명)	(단위:억원)
서울	13,732	12,078	0.9	140,684	0.1
녹산	1,503	10,385	6.9	28,266	0.4
대구	274	5,676	20.7	4,626	1.2
남동	7,920	28,032	3.5	84,410	0.3
부평	1,813	2,728	1.5	10,704	0.3
주안	1,320	3,467	2.6	13,292	0.3
광주첨단	2,199	5,735	2.6	18,889	0.3
빛그린	110	160	1.5	1,352	0.1
온산	461	57,557	124.9	14,670	3.9
울산·미포	1,024	126,614	123.6	96,964	1.3
반월	8,757	30,381	3.5	110,455	0.3
시화	11,149	31,132	2.8	129,163	0.2
시화MTV	1,223	3,319	2.7	14,897	0.2
파주탄현	46	47	1.0	266	0.2
동두천					
북평	51	46	0.9	878	0.1
오송생명과학	73	2,509	34.4	5,217	0.5
석문	191	1,074	5.6	1,476	0.7
아산	396	14,053	35.5	15,603	0.9
장항생태	31	183	5.9	628	0.3
국가식품클러스터	188	255	1.4	1,119	0.2
국가식품클러스터(외)	1				
군산	214	3,533	16.5	4,455	0.8
군산2	589	2,710	4.6	5,731	0.5
익산	306	1,342	4.4	3,237	0.4
광양	190	17,458	91.9	14,218	1.2
대불	338	1,711	5.1	5,666	0.3
대불(외)	24	191	8.0	1,082	0.2
여수	305	76,046	249.3	24,907	3.1
구미	2,694	35,276	13.1	80,182	0.4
구미(외)	23	1,255	54.5	3,667	0.3
포항	106	15,261	144.0	11,988	1.3
포항블루밸리	28	59	2.1	48	1.2
경남항공	0				
밀양나노	3				
안정	16	1,653	103.3	952	1.7
진해	3				
창원	2,953	52,289	17.7	118,562	0.4
계	60,254	544,833	9.0	969,968	0.6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23) 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23.9월 기준)

3.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주거권

3. 1.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법적 의무와 권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권리인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선거권, 사회보장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2011헌마474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은 국내 체류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로 입국하게 되며, 입국 이후 체류생활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재한외국인, 난민 등 체류 외국인 대상별 적용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또는 자녀)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과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체류 외국인 유형별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차별금지와 처우요구, 보육과 교육·상담,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보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2-21]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개별 법령상 권리 및 의무 규정

구분	체류 외국인 관련 ‘권리’ 조항	체류 외국인 관련 ‘의무’ 조항
출입국 관리법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제4조의 5)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권(제46조)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권(제60조)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한 청원권 (제56조의8)	출입국 심사를 받을 의무(제3조, 제12조) 유효한여권과 사증소지의 의무(제7조) 입국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제12조2)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을 의무(제 18조) 외국인등록 사항의 변경시 신고의무(제35조) 체류지변경신고의무(제36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임금 등 근로관계에 따른 청구권(제9조, 제12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직장가입자)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22조) 사업,사업장변경 신청권(제25조)	외국인취업교육참여의무(제11) 외국인고용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가입의무(제12조) 외국인고용 사용자의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의무(제23조)
다문화가족 지원법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6조, 제11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및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제8조,제9조) 아동, 청소년보육과 교육지원에 있어서 차별금지 및 지원(제10조)	
재한외국인 기본법	재한외국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제11조)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의료지원(제12조) 영주권자에 대하여 입국·체류 또는 경제활동 등의 보장(제13조)	
난민법	강제 송환되지 않을 권리(제3조) 난민 인정 신청권(제5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자료등의 열람, 복사 요청권(제16조)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자의 이의신청권(21조)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요구권(제30조) 난민인정자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등을 받을권리(제31조-제33조) 학력 및 자격 인정요구권(제35조,제36조) 배우자등의입국신청권(제37조)	면접과정에서 통역을 제공할 의무 면접종료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제공할 의무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할 의무 관계기관의의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권(제5조)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취득·보유·이용 및 처분권 및 금융거래권(제11조,제12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권리(제14조)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의무(제6조) 재외동포가 부담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지원할 정보의 의무(제4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국내 거소신고증의 발급의무(제7조)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투자의 대외송금 보장권(제3조)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그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권리(제3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권(제9조)	외국인투자자의 신고의무(제5조)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시 허가 의무(제6조)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22) 데니즌집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신광수(2019) 재인용)

3. 2.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와 주거권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
체의 주민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을 한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구역의 주민으로 볼 수 있으며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외국인이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생
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소
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
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로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2004년 8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고용허가제’⁵⁾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
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 제13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외
국인근로자는 외국인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또는 연체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보험
의 필수가입요건은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된다. 사
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이 있으며, 외국인근로
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일시 지
급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이며,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고 상해
보험은 업무상 재해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에 대비하는 것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5) 한국산업인력공단(2023)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근거	외고법 제13조 · 동법 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22조	외고법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27조	외고법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28조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 시 필요한 비용 충당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 · 질병에 대비
가입대상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적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각 호중 하나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별칙규정	미가입 시 500만원이하 벌금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벌금	미가입시 500만원이하 벌금
보험금 납부방법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근로자 1인당 1년/15,000원	일시금 3년/20,000여원 (성별 · 연령에 따라 차등)
보험금 지급사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 출국 제외), 체류자격변경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사업주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원칙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지급금액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0~102.4% 지급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0.0~107.6%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4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 상해사망, 후유장애: 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 고도장해: 1천5백만원
담당기관	삼성화재 (☎ 1600-0266)	삼성화재 (☎ 1600-0266)	서울보증보험 (☎ 02-777-6689)	삼성화재 (☎ 1600-0266)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3)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

[그림 2-6]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제도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이 의무가 되는 4대 보험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당연 적용되어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미가입자도 지역 가입의 대상이 된다. 2023년 2월 3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출국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게 된다.

● 4대 사회보험(‘23년 기준)

구분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			
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가입 강제여부	당연적용 * '19.7.16.부터 당연적용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미가입자도 당연 지역가입	당연적용	당연적용 *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 신청(임의가입)	당연적용 (상호주의)
당연적용 적용 제외	-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23.3.29.기준)
산출내역	표준보수월액 × 7.09%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	표준보수월액 × 요율	표준보수월액 × 9.0%
보험료 부담자	(직장가입자) 근로자 50% (3.545%) 사업주 50% (3.545%) (지역가입자) 근로자 100%	사업주 100%	사업주 전액부담 0.25~0.85% (규모기준 차등) (실업급여) 근로자 0.9% 사업주 0.9%	근로자 50%(4.5%) 사업주 50%(4.5%)
보험금 지급 및 혜택	외국인근로자 질병발생 시 진단, 치료, 재활지원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요양, 재활지원	실업예방, 고용촉진, 재취업지원	출국 시 반환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지방관서(고용센터) (☎ 1350)	국민연금공단 (☎ 1355)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3)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

[그림 2-7]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4대 사회보험 제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와 제18조의 2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재고용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도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따라 재입국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업종 이외에는 업종간 이동이 제한되고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최대 3회, 재고용으로 취업기간의 연장된 경우 연장기년 내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제도와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⁶⁾이 있었다. 판결요지에서 “직업의 자유 중 직장 선택의 자유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

6) 전원재판부, 판례집23권 2집 623~658,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이 있으므로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며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는 중이라면, 적어도 그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그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가 인정된다.”⁷⁾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할 안전과 사회보장서비스는 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낮은 곳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국내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수조항은 아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숙사의 구조와 설치장소, 주거 환경과 면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불법건축물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이 알려져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는 농장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하였으며, 2023년 3월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태국인 근로자가 돼지농장에서 사망하였다.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한다고 공표하였으며, 기존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자유로이 사업장을 변경토록 조치⁸⁾하고 있다.

또한, 2023년 8월까지의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⁹⁾이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21.1.1.부터 농·축산·어업, '21.7.1.부터 그 외 업종에 적용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숙소로 제공이 안돼요!

-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가설 건축물의 경우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가 불허됩니다.
*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특례고용가능 확인신청, 재고용 등 고용허가 신청 시 적용
- 단, 지자체에서 임시숙소로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사업장 건물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되어야 제공할 수 있어요!

-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기숙사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주세요!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항목	세부내용
침실	성별 및 근무조 구분하여 배정, 개인당 2.5㎡ 이상 면적 제공, 1실 거주인원 8명 이하, 수납시설 설치
냉·난방시설	적절한 냉방시설, 보일러(기름, 가스, 전기)를 이용한 바닥난방 시설 설치
화장실·샤워실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잠금장치	침실, 화장실·샤워실별 잠금장치
채광 및 환기시설	개폐형 창문 보유, 폐쇄형 창문인 경우 환풍기 설치
소방시설	방별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와 소화기 모두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 사업장에서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 건축물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되지 않은 사업장 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3)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

[그림 2-8]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7) 전원재판부, 판례집23권 2집 623~658,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내용 일부 요약정리

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3.8.)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7.26.)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보장 및 근로환경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숙박시설을 지정하고 숙소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2-22]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개별 법령상 권리 및 의무 규정

구분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인권보장 지원	가. 인권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나.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근로환경 지원	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목적 공간 마련 라. 필수 장비 구입 지원
주거환경 지원	가. 기숙사 건립 나.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다. 지역 숙박시설 지정 라. 숙소 임대료 지원

출처: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농업과 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한 한 것으로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공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열악한 가건물 또는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서 같이 사는 것은 기본이고, 화장실도 구비 되어있지 않은 숙소에 거주하면서도 1인 당 거주비를 30~40만원씩 사용주에게 지불¹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고용허가제 도입인원을 보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대비 제조업에 종사 하는 외국이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국내 청년들이 기피하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 자에게로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10) 한국일보(2023.3.8.) 돈사·냉골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언제까지 봐야 하나

4. 소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50만명에 달하며 이 중 20.8%는 단기취업 (C-4), E1~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E-10, 방문취업(H-2) 등 취업 자격을 가진 체류외국인이다. 등록외국인 131만명 중 50%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 고 있으며, 안산시(5.2만명), 화성시(4.4만명), 시흥시(3.7만명)에 많은 밀도로 거주 하고 있다. 등록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제조업 등의 인력 수급을 외국인이 지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88만명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7.6%에 이르고, 광·제조업 의 산업에 주로 근무하며 사회·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근 로자 비중이 36.7%에 달하며, 69.4%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열악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70% 이상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 으며, 안산시는 전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가진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소규모 사업장이 주로 분포되어 있어 입 주기업단위별 생산실적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의 인력 없이는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고 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최 소한으로 보장받아야할 안전 및 사회보장사항은 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최근에 이르러 대두 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농업과 어업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나 공장 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에 대해서 도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보이는 안산시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여 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과 실태 그리고 정책 수요 조사는 중요한 기초데이터가 될 것이다.

제3장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조사

본 장에서는 국내 외국인 거주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안산시를 대상지로 하고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외국인들의 주거실태를 살펴보자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이슈를 다각도로 진단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설문 조사 개요

1. 1. 조사 목적 및 방향

본 조사의 목적은 안산시 산업단지(반월/시화)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인식, 주거관련 어려움 및 주거환경변화를 파악하고 그들의 주거이슈를 다각도로 진단하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 논의의 장을 만드는데 활용될 것이다.

1. 2. 조사 설계

설문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가장 많은 외국인 거주자가 있는 안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3. 8~9월로 설정한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경, 생활 및 고용환경, 주거 여건, 정책 요구도로 구성된다. 설문 응답자 특성은 [표 3-1]과 같다.

설문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가장 많은 외국인 거주자가 있는 안산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3. 8~9월로 설정한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경, 생활 및 고용환경, 주거 여건, 정책 요구도로 구성된다. 설문 응답자 특성은 [표 3-2]와 같다.

[표 3-1]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안산시 내 산업단지(반월/시화)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표본 규모	302명
조사 방법	개별면접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5.6%p
조사 내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경, 생활 및 고용환경, 주거 여건, 정책 요구도
조사 기간	2023년 8월 14일 ~ 9월 15일

표본 설계는 안산시 내 외국인 비중과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 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하였다.

[표 3-2] 설문조사 표본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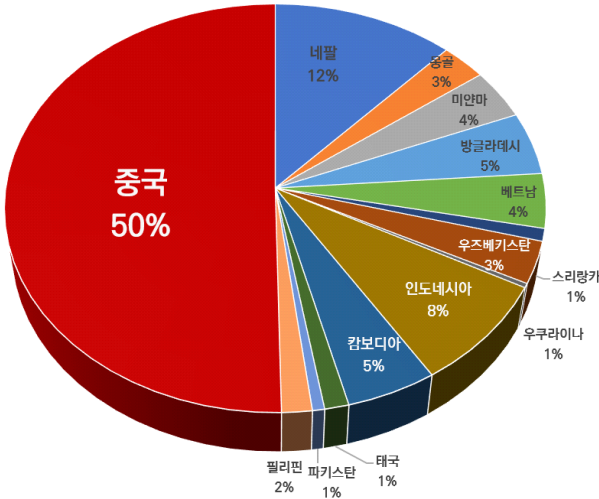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규모			합계
		5인 미만	5~30인 미만	30~50인 미만	
지역별	중국	45 (45)	60 (62)	45 (45)	152 (150)
	그 외	45 (45)	60 (60)	45 (45)	150 (150)
계		90 (90)	120 (122)	90 (90)	302 (300)

* 괄호는 최종 회수량을 의미함

1. 3. 응답자 특성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사 응답자 기본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선행 조사 및 안산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응답자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중국 국적 응답자의 제한을 50%로 두었다. 그 다음으로 네팔(12%), 인도네시아(8%), 캄보디아(5%) 순의 응답자의 국적 비율을 보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가 위치한 성곡동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다. 또한, 원곡동과 원시동과 같은 전형적인 외국인 거주 지역에도 높은 거주 비율을 나타냈다. 응답자 중 대다수(88.7%)는 20대와 30대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월 소득은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인 경우가 85.4%로 높게 나타났다. 체류 자격 측면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 비자들은 고용허가제도 하에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도

는 국내 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E-9 비자와 H-2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의 비율은 각각 53.6%와 44.0%로 나타났다.



[그림 3-1]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응답자 국적 비중



[그림 3-2]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응답자 주 거주지 분포

[표 3-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02)	100.0
국적	중국	(152)	50.3
	그 외	(150)	49.7
성별	남성	(300)	99.3
	여성	(2)	0.7
연령	20대	(152)	50.3
	30대	(116)	38.4
	40대	(23)	7.6
	50대 이상	(11)	3.6
지역	단원구	(291)	96.4
	상록구	(11)	3.6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29.8
	5~30인 미만	(122)	40.4
	30~50인 미만	(90)	29.8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11.3
	1~2년 미만	(67)	22.2
	2~3년 미만	(78)	25.8
	3~5년 미만	(68)	22.5
	5년 이상	(55)	18.2
혼인 여부	기혼	(52)	17.2
	미혼	(250)	82.8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79.8
	단기 근로자	(61)	20.2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	(7)	2.3
	200~250만원 미만	(33)	10.9
	250~300만원 미만	(138)	45.7
	300~350만원 미만	(120)	39.7
	350~400만원 미만	(2)	0.7
	400만원 이상	(2)	0.7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162)	53.6
	방문취업	(133)	44.0
	전문인력	(4)	1.3
	재외동포	(1)	0.3
	결혼이민	(2)	0.7

2. 주요 주거이슈별 분석 결과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조사〉	
■ 한국 생활 및 고용 환경	
1) 한국 생활(입국 목적 및 생활 만족도)	
2) 일터 환경(고용 여건 및 만족도)	
■ 주거여건과 실태	
1) 누구와 거주하는가? (가구원 및 동거자 정보)	
2)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나? (주택유형, 점유형태, 입지, 거처 마련방법, 주거비 수준)	
3) 살고 있는 주택의 상태(주택의 구조적 상태)	
■ 주거 만족도와 주거 인식	
1)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2) 주거 관련 어려움과 거주 의의(거주의 의의 or 경제적 의의)	
3) 이웃과 지역사회 교류 수준	
■ 정책 요구	
1) 정책적 수요(주거 상담, 필요로 하는 주거정책, 주거 공간의 수요)	
2) 공공임대주택 수요(인지와 입주희망)	

2. 1. 한국 생활 및 고용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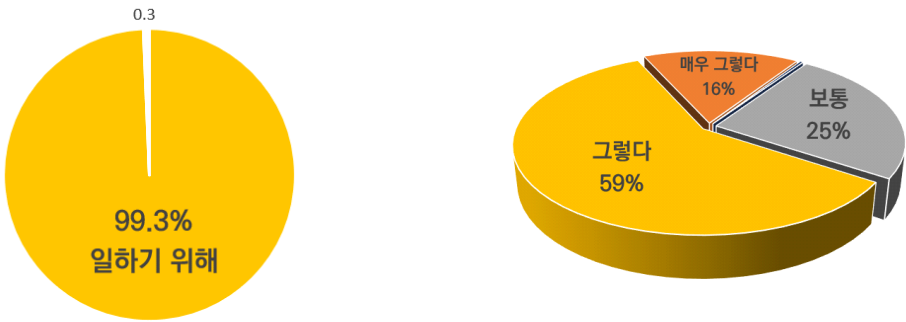
1) 한국 생활(입국 목적 및 생활 만족도)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의 당초 한국에 온 목적은 99.3%가 ‘일을 하기 위해’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업이나 가족의 이유 등으로 한국에 온 이후 근로자가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한국 입국 목적은 성별, 연령, 소득 등 다양한 변수에 상관없이 100%에 가까운 비율로 대부분 ‘일’을 목적으

로 한국에 입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 었다. 전체 응답자의 59%는 대체적으로 한국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16%에 달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한국 생활 1년 미 만의 만족도 5점 척도 점수는 4.53으로 높았으나, 5년 이상 거주 응답자의 경우 3.67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기혼자(4.04)에 비해 미혼자(3.88)의 생활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단기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3.43)에 비해 고용 안 정성이 높은 ‘상시 근로’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4.02)으로 나 타났다. 소득의 측면에서도 월 평균 소득과 한국생활의 만족도는 정비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고 민간 임대 등 다른 방 법으로 거처를 마련한 응답자 간의 한국생활 만족도도 차이가 있었다. 회사 거처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07의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회사 미지원 거처에 거주 하는 응답자는 3.57의 만족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회사 거처에 거주하는 외 국인 근로자의 22.8%는 한국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단지 2% 만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회사 미지원 거처 외국인 근로자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체류자격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9 비전문취업 비자 소유자와 H-2 방문취업 비자 응답자 간 한국생활 만족도 차이를 보였다. 고용허가 제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E-9 비자 응답자는 4.09의 만족도 점수를 나타낸 반 면, H-2 비자 응답자는 3.68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용허가제 E-9비자의 절차 (process)에 있어서 한국 시 근로하게 될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처를 확보해야하는 비자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에서 지 원되는 거처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결과 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3] 한국 입국 목적(좌), 한국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우)

[표 3-4] 전반적인 한국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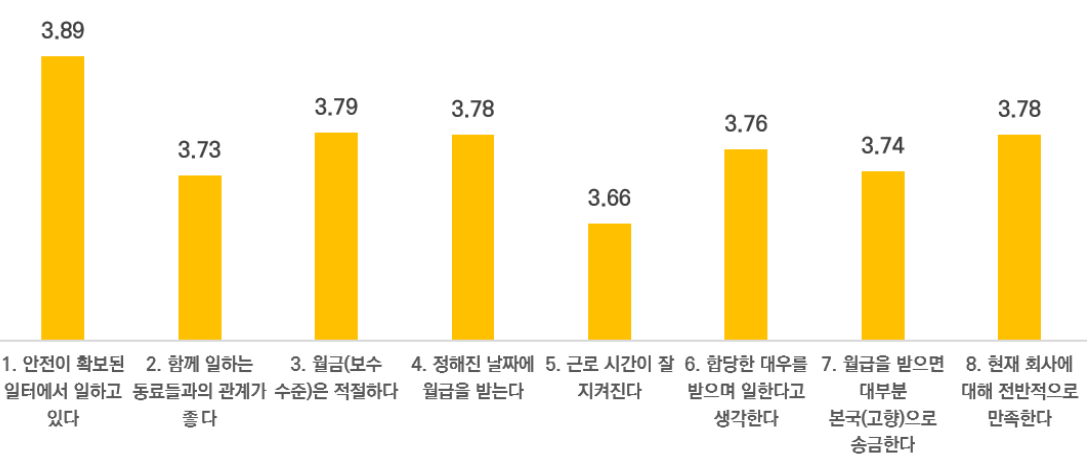
구분		사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2)	0.3	24.8	58.9	15.9	3.90
연령	20대	(152)	0.0	27.0	52.6	20.4	3.93
	30대	(116)	0.9	22.4	62.1	14.7	3.91
	40대	(23)	0.0	17.4	82.6	0.0	3.83
	50대 이상	(11)	0.0	36.4	63.6	0.0	3.64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1.1	32.2	52.2	14.4	3.80
	5~30인 미만	(122)	0.0	20.5	63.1	16.4	3.96
	30~50인 미만	(90)	0.0	23.3	60.0	16.7	3.93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0.0	2.9	41.2	55.9	4.53
	1~2년 미만	(67)	0.0	32.8	49.3	17.9	3.85
	2~3년 미만	(78)	1.3	21.8	61.5	15.4	3.91
	3~5년 미만	(68)	0.0	25.0	67.6	7.4	3.82
	5년 이상	(55)	0.0	32.7	67.3	0.0	3.67
혼인 상태	기혼	(52)	1.9	17.3	55.8	25.0	4.04
	미혼	(250)	0.0	26.4	59.6	14.0	3.88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0.4	16.6	63.1	19.9	4.02
	단기 근로자	(61)	0.0	57.4	42.6	0.0	3.43
월 평균 소득 (만 원)	150~200미만	(7)	0.0	28.6	71.4	0.0	3.71
	200~250미만	(33)	0.0	21.2	78.8	0.0	3.79
	250~300미만	(138)	0.0	35.5	51.4	13.0	3.78
	300~350미만	(120)	0.8	13.3	60.8	25.0	4.10
	350~400미만	(2)	0.0	0.0	100.0	0.0	4.00
	500 이상	(2)	0.0	50.0	50.0	0.0	3.50
숙소 제공자	회사	(202)	0.5	14.9	61.9	22.8	4.07
	그 외	(100)	0.0	45.0	53.0	2.0	3.57
체류자격 (비자)	E-9(비전문취업)	(162)	0.6	16.0	57.4	25.9	4.09
	H-2(방문취업)	(133)	0.0	36.1	59.4	4.5	3.68
	그 외	(7)	0.0	14.3	85.7	0.0	3.86

2) 일터 환경(고용 여건 및 만족도)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여건과 현재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그림 3-4).



[그림 3-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건 및 만족도



[그림 3-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건 및 만족도(5점 척도)

먼저 일터의 안전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식 및 동의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응답자의 78.8%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용 여건 문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의 긍정 응답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2030 청년 외국인 근로자들의 5점 만점 결과가 3.96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4050중장년 층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3.55대로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터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결과가 3.74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형태에서도 상시근로자의 작업환경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점수가 3.96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회사 제공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일터에 대한 동의도 또한 4.05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두 번째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한 여건조사 결과, 전체 응답의 5점 환산 값이 3.73으로 고용 여건들에 대한 문항들 중 낮은 수준의 동의를 나타내었다. 이는 근로시간 준수 항목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점수이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단기 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보다 동료 간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제공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동료 간 관계가 좋다는 점수가 4.05로 높은 반면, 회사 제공 거처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3.58의 동의 점수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급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3.79로 낮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302명의 응답자 가운데 월소득이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에 속하는 응답자 비율이 약 86%에 달하는 258명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현재의 월소득 수준에 불만족 하지 않는 결과로 해석된다. 게다가 조사에 응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국의 통화 가치와 한국의 원화 화폐 가치의 차이로 인하여 월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낮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30 청년 외국인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적절성 동의도가 4050이상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 별로 살펴볼 때, 한국 생활 1년 미만의 응답자가 월급에 대한 만족도가 4.1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 미혼보다 월급에 대한 적절성에 동의하였으며, 상시근로자가 단기근로자 보다 월급에 대한 적절성에 동의하였다. 월소득이 높을 수록 월급에 대한 적절성에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고용허가제(E-9)비자 외

국민 근로자의 월급 적절성에 대한 응답(3.95)이 방문취업(H-2)비자(3.61)나 그 이외의 비자(3.43)와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다.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받는가에 대한 응답은 전체 3.78로 낮지 않은 점수 값을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기 근로자(3.44), 월소득 250만원 이하 응답자(평균 3.4), 회사 제공 거처 이외 거주 응답자(3.50), 방문취업 비자 응답자(3.64)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근로시간 준수 여부 항목은 가장 동의도가 낮은 3.66의 점수를 나타내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었다고 보인다. 40대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으며, 단기 근로자의 동의도(3.36) 또한 상시 근로자(3.74)에 비해 크게 낮았다. 회사 지원 숙소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동의도가 3.81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숙소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3.36으로 크게 낮은 동의도 수준을 보였다.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지에 대한 전체 동의도는 3.76으로 낮지 않는 결과 값을 보였다. 2030 청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도를 나타내었으며, 한국 체류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동의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시 근로자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3.85로 단기근로자의 3.44보다 크게 높았다. 월평균 소득 부문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회사 지원 거처에 사는 응답자, 그리고 E-9 비전문취업 비자인 응답자의 경우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고 생각하는 결과 값이 각각 3.88, 3.8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회사 지원 거처 이외에 거주하는 응답자나 H-2방문취업 비자 응답자는 각각 3.54, 3.62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였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본국(고향)으로 송금하는지에 대한 동의도는 3.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응답 값이 3.89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의 경우 대부분 미혼으로 가족은 본국에 거주하고 혼자 한국으로 일을 위해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월급의 대부분을 고향으로 송금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82.8%가 미혼이며, 20대의 경우는 97.4%가 미혼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만 한국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고향 국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8%로 나타났다. 이는 월급을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부분 송금하게 되는 현실적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고향으로 월급을 송금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보다 미혼의 경우 고향으로 월급을 송금하는 것에 대한 동의(3.76)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 지원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동의도(3.8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E-9 비자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다른 비자 소지 근로자보다 고향으로 월급을 송금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현재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5). 전체 응답자의 64.9%가 현재 회사에 대한 긍정 응답을 나타낸 가운데 세부적인 특성별로 만족의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 특성을 확인할 때, 20대의 5점 평균 현재 회사의 만족도는 3.86인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만족도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50대 이상의 경우 3.64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회사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년 미만의 한국 거주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88.2%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5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만족 응답 비중이 55.9%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형태를 구분할 때 상시 근로자의 회사 만족 비율이 72.6%로 34.4%의 단기 근로자 외국인 응답자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거처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 응답자의 경우 5점 만점에 3.97 수준으로 76.7%의 만족 응답 비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회사 숙소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보다 크게 낮은 3.42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효해 보인다. 이는 E-9 비자 응답 근로자의 회사 만족도(3.95)가 방문취업(H-2) 응답자의 만족도(3.71)보다 높은 결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5] 응답자 특성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건 및 만족도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안전이 확보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다	월급(보수 수준)은 적절하다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는다	근로 시간이 잘 지켜진다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고 생각한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본국(고향)으로 송금한다
연령	전체	(302)	3.89	3.73	3.79	3.78	3.76	3.74
	20대	(152)	3.96	3.80	3.80	3.86	3.84	3.89
	30대	(116)	3.91	3.69	3.82	3.78	3.73	3.64
	40대	(23)	3.57	3.52	3.65	3.43	3.48	3.30
사업체 규모	50대 이상	(11)	3.55	3.55	3.55	3.45	3.64	3.45
	5인 미만	(90)	3.74	3.78	3.70	3.68	3.79	3.70
	5~30인 미만	(122)	3.98	3.68	3.91	3.86	3.77	3.79
	30~50인 미만	(90)	3.93	3.74	3.71	3.79	3.73	3.70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4.32	4.18	4.18	4.12	4.32	4.32
	1~2년 미만	(67)	3.81	3.73	3.72	3.70	3.70	3.57
	2~3년 미만	(78)	3.83	3.68	3.83	3.78	3.71	3.58
	3~5년 미만	(68)	3.91	3.75	3.72	3.85	3.81	3.85
혼인 상태	5년 이상	(55)	3.80	3.49	3.65	3.60	3.53	3.65
	기혼	(52)	4.02	3.73	3.98	3.67	3.83	3.63
고용 상태	미혼	(250)	3.87	3.73	3.75	3.81	3.75	3.76
	상시 근로자	(241)	3.96	3.80	3.90	3.87	3.85	3.73
	단기 근로자	(61)	3.62	3.43	3.34	3.44	3.44	3.74
	150~200미만	(7)	3.57	3.71	3.43	3.43	3.43	3.43
월 평균 소득	200~250미만	(33)	3.67	3.52	3.33	3.39	3.55	3.39
	250~300미만	(138)	3.81	3.70	3.75	3.72	3.56	3.72
	300~350이상	(124)	4.07	3.83	3.99	3.97	3.83	3.88
	회사	(202)	4.05	3.83	3.95	3.93	3.88	3.86
숙소 제공자	그 외	(100)	3.58	3.53	3.47	3.50	3.54	3.49
체류자격 (비자)	E-9(비전문취업)	(162)	4.00	3.81	3.95	3.91	3.87	3.81
	H-2(방문취업)	(133)	3.77	3.61	3.61	3.64	3.62	3.65
	그 외	(7)	3.71	4.00	3.43	3.57	4.00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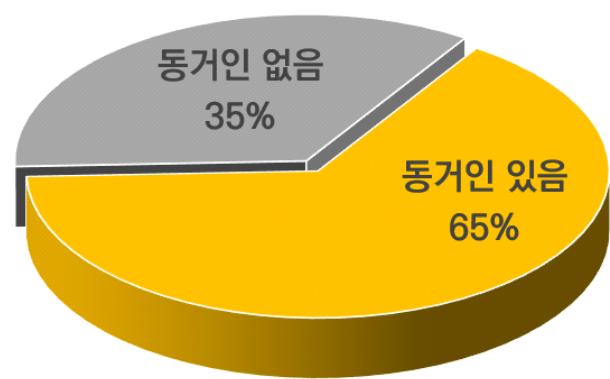
[표 3-6] 전반적인 현재 회사 만족도

구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5점 평균]
전체		(302)	1.0	34.1	64.9	3.78
연령	20대	(152)	2.0	28.9	69.1	3.86
	30대	(116)	0.0	34.5	65.5	3.79
	40대	(23)	0.0	65.2	34.8	3.35
	50대 이상	(11)	0.0	36.4	63.6	3.64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0.0	42.2	57.8	3.68
	5~30인 미만	(122)	0.8	26.2	73.0	3.88
	30~50인 미만	(90)	2.2	36.7	61.1	3.77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0.0	11.8	88.2	4.29
	1~2년 미만	(67)	1.5	26.9	71.6	3.85
	2~3년 미만	(78)	0.0	32.1	67.9	3.85
	3~5년 미만	(68)	2.9	41.2	55.9	3.62
	5년 이상	(55)	0.0	50.9	49.1	3.51
혼인 상태	기혼	(52)	1.9	32.7	65.4	3.85
	미혼	(250)	0.8	34.4	64.8	3.77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0.8	26.6	72.6	3.90
	단기 근로자	(61)	1.6	63.9	34.4	3.33
숙소 제공자	회사	(202)	1.0	22.3	76.7	3.97
	그 외	(100)	1.0	58.0	41.0	3.42
체류자격(비자)	E-9(비전문취업)	(162)	0.6	24.7	74.7	3.95
	H-2(방문취업)	(133)	1.5	46.6	51.9	3.57
	그 외	(7)	0.0	14.3	85.7	4.00

2. 2. 주거 여건과 실태

1) 누구와 거주하는가? (가구원 및 동거자 정보)

외국인 근로자들의 65%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평균적으로 1.45명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직장동료, 친구 등 기타 동거인과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동료와 함께 거주한다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은 약 61%로 평균 1.8명의 직장동료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등 기타 동거인의 비중은 약 36%로 평균 1.5명의 친구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6] 외국인 근로자 거주 동거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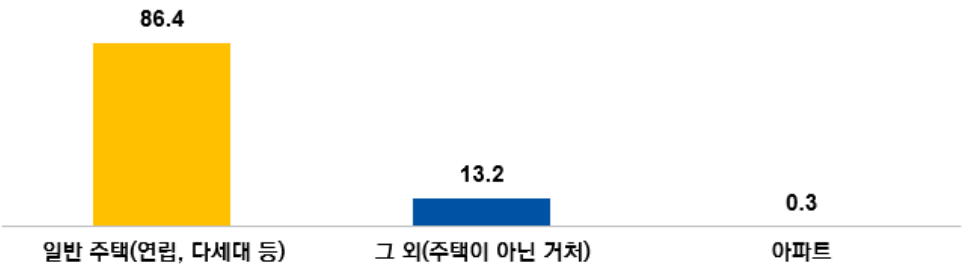
[표 3-7] 동거인 있는 응답자의 동거인 정보(유형, 인원, 평균 동거인 수)

구분	전체	직장동료	친구 등 기타	그 외(가족 등)
가구수	197	120	71	6
가구원수	348	217	104	27
평균 동거인수	1.8	1.8	1.5	4.5

2)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나?

■ 주택 유형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된 거주 주택 유형은 연립·다세대 등의 ‘일반주택’ 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주거실태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다양한 주택 유형과 명칭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 쉽게 주택유형을 구분하였다. 연립·다세대·다가구 유형의 ‘일반주택’과 컨테이너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 그리고 아파트로 구분하였다. 86.4%의 응답자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아파트 0.3%, 그 외 13.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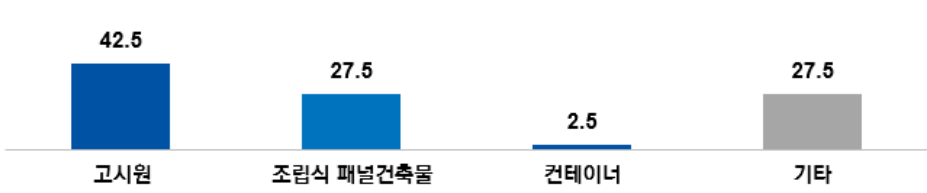
[그림 3-7] 거주 주택 유형

연령별 거주 거처유형을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2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 별로 살펴보면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형태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시근로자의 경우 일반 주택 거주가 89.2%로 나타난 반면 임시 일용직 단기 근로자의 경우 75.4%만 일반 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체류자격(비자)의 경우 E-9비자 소지 응답자는 93.2%가 일반 주택유형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나,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 응답자는 78.2%가 일반주택 유형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21.1%로 E-9비자 소지 응답자의 6.8%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8] 거처 유형

구분		사례수	일반 주택(연립, 다세대 등)	그 외(주택이 아닌 거처)	아파트
전체		(302)	86.4	13.2	0.3
연령	20대	(152)	87.5	12.5	0.0
	30대	(116)	87.9	12.1	0.0
	40대	(23)	69.6	26.1	4.3
	50대 이상	(11)	90.9	9.1	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86.7	13.3	0.0
	5~30인 미만	(122)	85.2	14.8	0.0
	30~50인 미만	(90)	87.8	11.1	1.1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100.0	0.0	0.0
	1~2년 미만	(67)	91.0	9.0	0.0
	2~3년 미만	(78)	91.0	9.0	0.0
	3~5년 미만	(68)	77.9	22.1	0.0
	5년 이상	(55)	76.4	21.8	1.8
혼인 상태	기혼	(52)	86.5	11.5	1.9
	미혼	(250)	86.4	13.6	0.0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89.2	10.4	0.4
	단기 근로자	(61)	75.4	24.6	0.0
월 평균 소득	150~200만원 미만	(7)	100.0	0.0	0.0
	200~250만원 미만	(33)	84.8	15.2	0.0
	250~300만원 미만	(138)	84.8	15.2	0.0
	300~350만원 미만	(120)	87.5	11.7	0.8
	350~400만원 미만	(2)	100.0	0.0	0.0
	500만원 이상	(2)	100.0	0.0	0.0
숙소 제공자	회사	(202)	86.1	13.9	0.0
	그 외	(100)	87.0	12.0	1.0
체류자격(비자)	E-9(비전문취업)	(162)	93.2	6.8	0.0
	H-2(방문취업)	(133)	78.2	21.1	0.8
	그 외	(7)	85.7	14.3	0.0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고시원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42.5%, 조립식 패널 건축물에 거주하는 비율은 27.5%이며 컨테이너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5%로 나타났다. 기타의 비중이 2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8] 주택이 아닌 거처 유형 비중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운데, 회사 제공 숙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고시원 거주 28.6%, 조립식 패널건축물 35.7%로 나타난 반면, 회사 미지원 거처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고시원(75%)에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9] 응답 특성별 주택이 아닌 거처 유형 비중

구분		사례수	고시원	조립식 패널건축물	컨테이너
전체		(40)	42.5	27.5	2.5
숙소 제공자	회사	(28)	28.6	35.7	3.6
	그 외	(12)	75.0	8.3	0.0

거주하는 곳의 위치에 관한 조사 결과 응답자 83%는 지상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3%는 지하(반지하) 거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4%는 건물옥상(옥탑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지하(반지하)거주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7.2% 만이 지하(반지하)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5.5% 가 지하(반지하)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여 연령 별로 큰 비중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업체 규모에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응답자의 반지하 혹은 옥탑방 거주 비율이 2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별로 살펴보면 5년 이상 오래 체류한 응답자의 경우 지하(반지하) 거주비중이 32.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용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 일용직 단기 외국인 근로자의 지하(반지하), 옥탑방 거주 비중이 45.9%로 상시 근로자의 10.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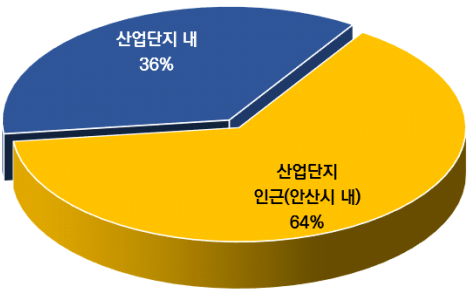
를 제공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지상층에 거주(96.5%)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회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는 지하(반지하)34%, 건물옥상(옥탑방) 12%의 결과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0] 응답 특성별 거주지 위치(상하 기준)

구분		사례수	지상층	지하(반지하)	건물옥상 (옥탑방)
전체		(302)	82.5	13.2	4.3
연령	20대	(152)	88.2	7.2	4.6
	30대	(116)	80.2	15.5	4.3
	40대	(23)	69.6	26.1	4.3
	50대 이상	(11)	54.5	45.5	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74.4	20.0	5.6
	5~30인 미만	(122)	80.3	14.8	4.9
	30~50인 미만	(90)	93.3	4.4	2.2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94.1	5.9	0.0
	1~2년 미만	(67)	77.6	13.4	9.0
	2~3년 미만	(78)	89.7	5.1	5.1
	3~5년 미만	(68)	88.2	10.3	1.5
	5년 이상	(55)	63.6	32.7	3.6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89.6	7.5	2.9
	단기 근로자	(61)	54.1	36.1	9.8
숙소 제공자	회사	(202)	96.5	3.0	0.5
	그 외	(100)	54.0	34.0	12.0
체류자격(비자)	E-9(비전문취업)	(162)	87.0	7.4	5.6
	H-2(방문취업)	(133)	77.4	19.5	3.0
	그 외	(7)	71.4	28.6	0.0

거처의 지리적 입지를 살펴보면 응답자 63.9%는 산업단지 인근(안산시 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6.1%는 산업단지 내에 거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 세대 외국인 근로자 응답자의 경우 30~40% 비중의 응답자가 산업단지 내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나, 40대 이상 응답자는 대부분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거주기간이나 월평균 소득 부분에서는 거주 입지에 대한 특별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숙소 제공자 측면에서 회사의 숙소 지원을 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응답자의 경우 100% 산업단지 인근에 거처

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 숙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거주하는 비중이 54%로 과반 이상을 나타내었다. 비자유형에 따른 특성은 E-9비자 소지 응답자는 53.1%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고 나머지 46.9%는 산업단지 내에 거주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H-2 방문취업 비자 응답자의 경우 78.2%가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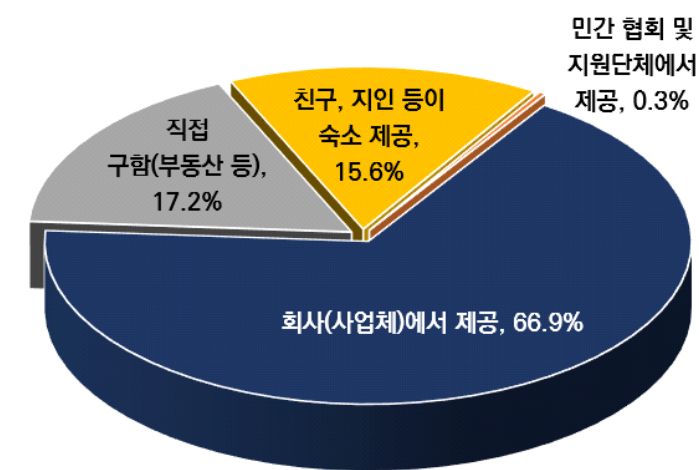
[그림 3-9] 거처의 입지

[표 3-11] 응답자 특성별 거처의 입지

구분		사례수	산업단지 인근(안산시 내)	산업단지 내
전체		(302)	63.9	36.1
연령	20대	(152)	54.6	45.4
	30대	(116)	66.4	33.6
	40대	(23)	95.7	4.3
	50대 이상	(11)	100.0	0.0
	1년 미만	(34)	14.7	85.3
한국 거주기간	1~2년 미만	(67)	70.1	29.9
	2~3년 미만	(78)	64.1	35.9
	3~5년 미만	(68)	57.4	42.6
	5년 이상	(55)	94.5	5.5
	상시 근로자	(241)	54.8	45.2
고용 상태	단기 근로자	(61)	100.0	0.0
	150~200만원 미만	(7)	100.0	0.0
월 평균 소득	200~250만원 미만	(33)	97.0	3.0
	250~300만원 미만	(138)	71.7	28.3
	300~350만원 미만	(120)	43.3	56.7
	350~400만원 미만	(2)	50.0	50.0
	500만원 이상	(2)	100.0	0.0
	회사	(202)	46.0	54.0
숙소 제공자	그 외	(100)	100.0	0.0
	E-9(비전문취업)	(162)	53.1	46.9
체류자격(비자)	H-2(방문취업)	(133)	78.2	21.8
	그 외	(7)	42.9	57.1

■ 회사 지원 거처 여부, 점유형태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66.9%가 근무하는 회사(사업체)에서 제공한 숙소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E-9 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한국할 때 근무하게 될 사업체로부터 숙소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다. 외국인 근로자 응답자 가운데 E-9 비자 소지 비율이 53.6%인 것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과반 이상의 응답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숙소를 지원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등을 통해 직접 집을 구하였다는 비중도 17.2%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친구, 지인 등이 숙소를 제공한 경우도 15.6%에 달하였다. 반면, 민간 협회 및 지원단체에서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0.3%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3-10] 거처 마련 방법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2030 청년 외국인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70% 이상이 살고 있는 거처를 회사에서 숙소 개념으로 제공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응답자 연령이 40대 이상부터는 직접 구하는 비중이나, 친구, 지인 등을 통해 숙소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사업체 규모에 있어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받았다는 비중이 58.9%인 반면, 5~30인 미만 67.2%, 30~50인 미만은 74.4%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 상태에서는 상시 근로 외국인 근로자와 임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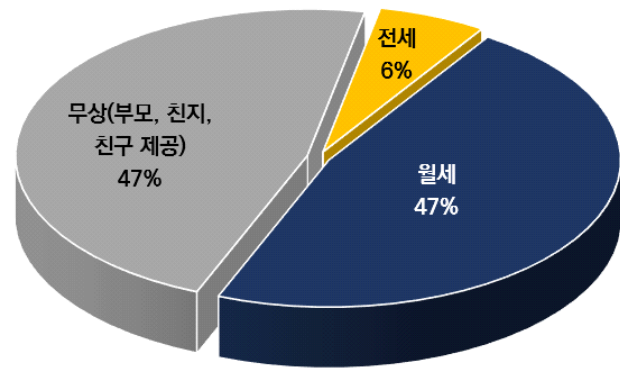
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상시 근로자의 경우 78.8%가 회사 지원을 통해 거처를 마련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단기 근로자의 경우 단지 19.7%만이 회사지원 거처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신 직접 구하거나(34.4%), 친구 및 지인을 통해 숙소를 해결(45.9%)한다고 응답하였다. 체류자격 별로 살펴보면 E-9 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77.2%가 회사 지원을 통해 거처를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 응답자의 경우 54.9%가 회사 지원을 통해 거처를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회사가 지원하는 거처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택 점유형태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뉘어 졌는데, 월세로 살고 있다고 응답한 47%와 무상으로 부모, 친지, 친구를 통해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전세는 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3-12] 응답자 특성별 거처 마련 방법

구분		사례수	회사(사업체)에서 제공	직접 구함(부동산 등)	친구, 지인 등이 숙소 제공	민간 협회 및 지원단체에서 제공
전체		(302)	66.9	17.2	15.6	0.3
연령	20대	(152)	71.1	15.8	12.5	0.7
	30대	(116)	72.4	12.9	14.7	0.0
	40대	(23)	30.4	34.8	34.8	0.0
	50대 이상	(11)	27.3	45.5	27.3	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58.9	16.7	24.4	0.0
	5~30인 미만	(122)	67.2	18.9	13.1	0.8
	30~50인 미만	(90)	74.4	15.6	10.0	0.0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78.8	12.9	7.9	0.4
	단기 근로자	(61)	19.7	34.4	45.9	0.0
체류자격(비자)	E-9(비전문취업)	(162)	77.2	16.0	6.8	0.0
	H-2(방문취업)	(133)	54.9	17.3	27.1	0.8
	그 외	(7)	57.1	42.9	0.0	0.0

회사로부터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다수는 민간 월세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 지인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공식적인 주거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혹은 일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3-11] 회사 미지원 응답자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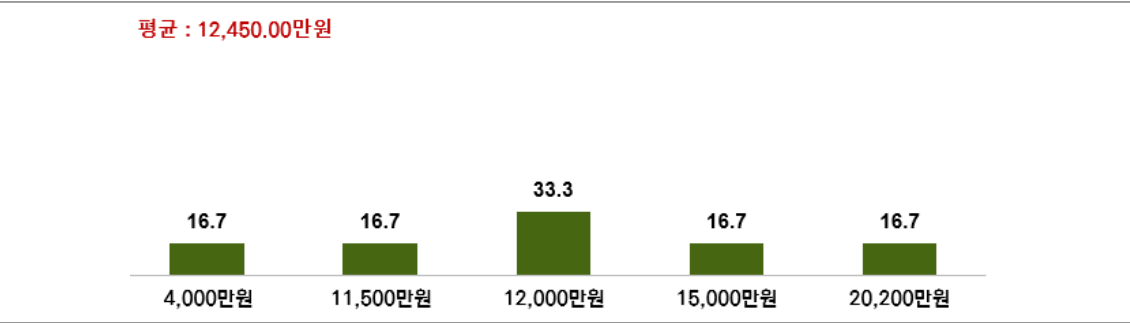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5인 미만 응답자의 경우 월세 비중 (37.8%)보다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비율이 59.5%로 더 높았다. 반면 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월세로 사는 비중이 각 그룹의 약 52%로 무상 비율 약 4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과 미혼 응답 외국인 근로자 모두 월세 비중이 각각 45.5%, 47.4%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혼 응답자의 경우 전세로 살고 있다는 비중이 22.7%로 비율상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상태 중 상시 근로 응답자의 경우 월세 51%, 전세 11.8%의 응답을 보인 반면, 단기 근로 응답자는 월세 42.9%, 무상 57.1%의 응답을 보여 차이를 나타냈다. 체류자격(비자)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E-9 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가 67.6%로 가장 높았으며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중이 약 30%인 반면,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 응답자의 경우 월세가 33.3%, 무상이 60%의 비중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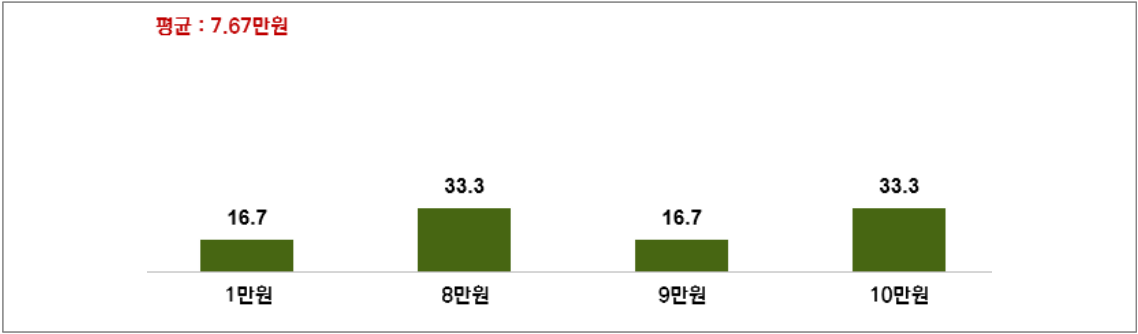
[표 3-13] 응답자 특성별 회사 미지원 응답자 점유형태

구분		사례수	월세	무상(부모, 친지, 친구 제공)	전세
전체		(100)	47.0	47.0	6.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37)	37.8	59.5	2.7
	5~30인 미만	(40)	52.5	40.0	7.5
	30~50인 미만	(23)	52.2	39.1	8.7
혼인 상태	기혼	(22)	45.5	31.8	22.7
	미혼	(78)	47.4	51.3	1.3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51)	51.0	37.3	11.8
	단기 근로자	(49)	42.9	57.1	0.0
체류자격(비자)	E-9(비전문취업)	(37)	67.6	29.7	2.7
	H-2(방문취업)	(60)	33.3	60.0	6.7
	그 외	(3)	66.7	0.0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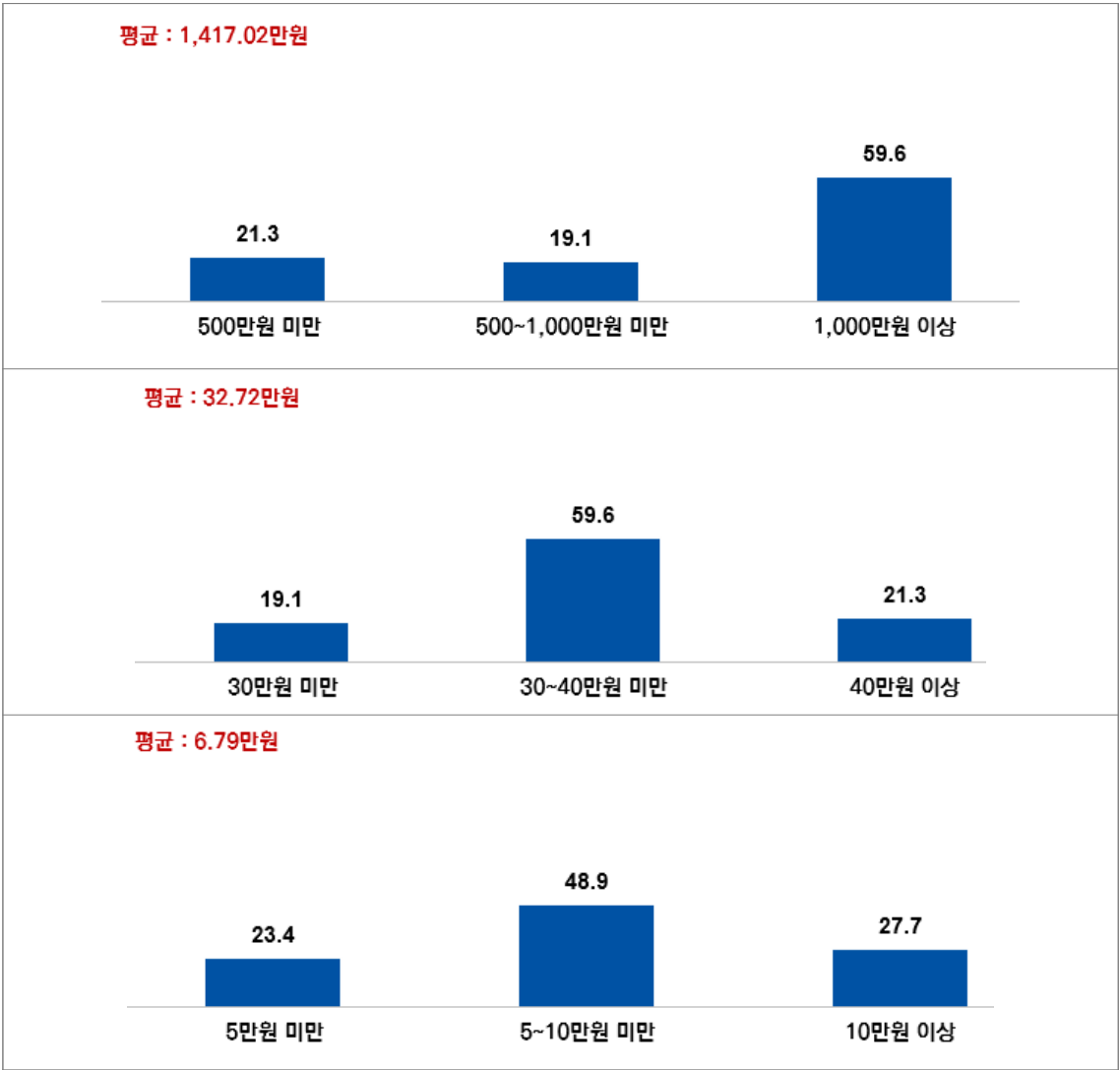
■ 주거비 수준 및 부담 정도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회사 지원 숙소에 살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주거를 해결하는 외국인 응답자들의 주거비 수준을 살펴본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평균 1억 2,450만 원, 관리비 평균 7.67로 나타났다. 전세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샘플수가 6개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보증금 1천 417만 원에 월세로 매달 평균 3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는 평균 6만 8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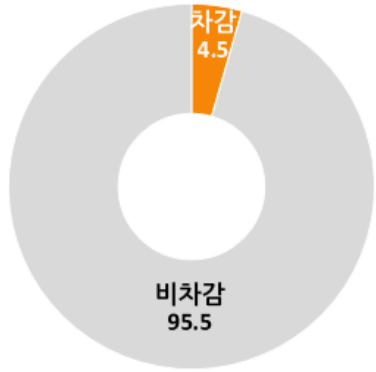


[그림 3-12] 회사 미지원 전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정도(보증금(위), 관리비(아래))



[그림 3-13] 회사 미지원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정도(보증금(위), 월세(중간), 관리비(아래))

이에 반해, 회사 숙소를 지원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덜 한 것으로 보인다. 월급에서 주거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5.5%에 달하였으며, 차감 하는 경우 월 평균 25만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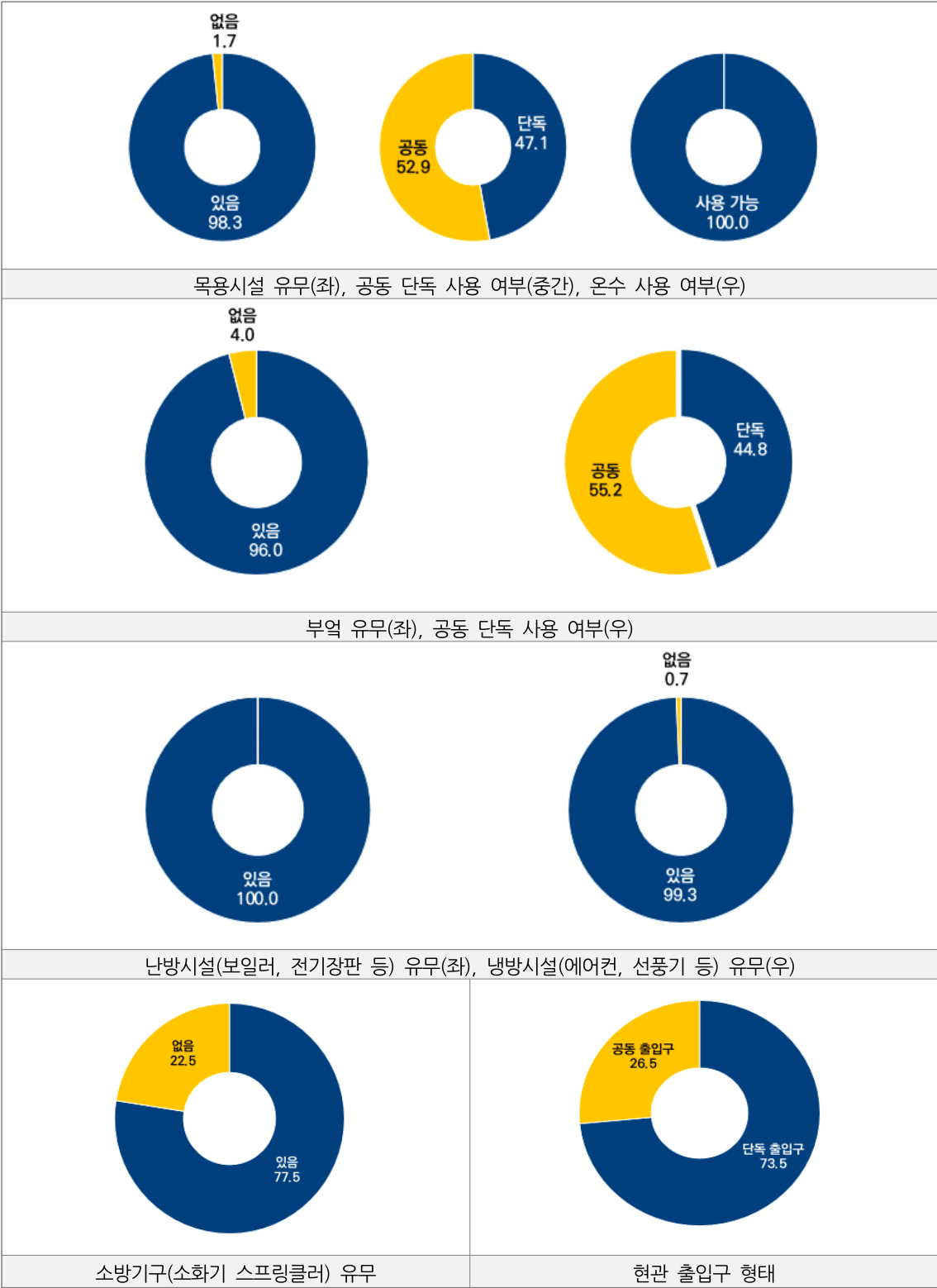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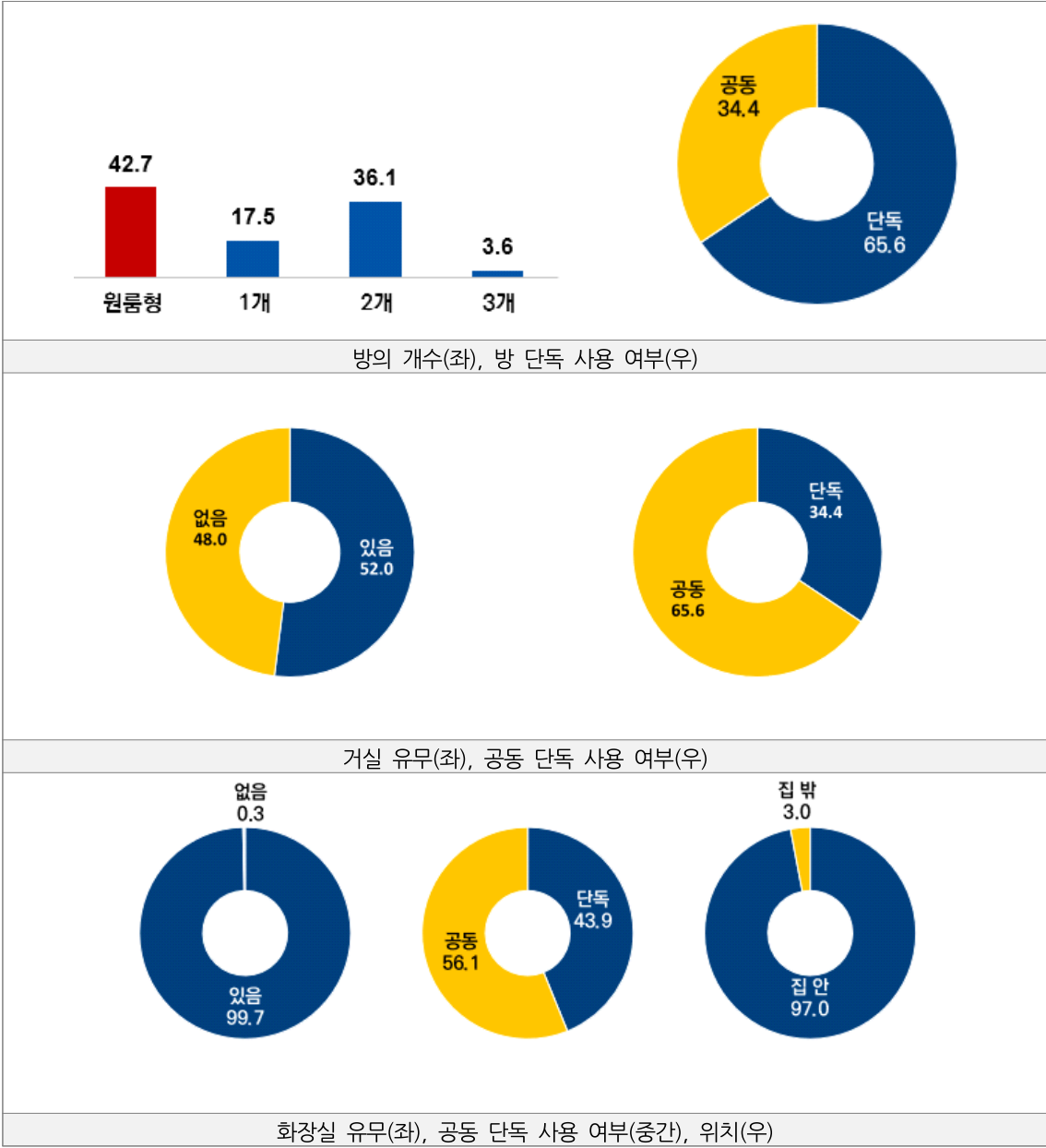


[그림 3-14] 회사 지원 숙소 거주자의 주거비 월급 차감 여부

3) 살고 있는 주택의 상태(주택의 구조적 상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구조적 상태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의 개수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2.7%가 원룸형 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았던 방의 개수 형태는 2룸 이었다.(36.1%) 방을 혼자 사용한다는 응답은 전체 65.6%로 과반을 넘었으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응답 비중도 34.4%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 집 안에 거실이 있는 경우는 52%로 없다는 응답의 48%에 비해 높았으며, 거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도 65.6%로 단독으로 거실을 사용한다는 34.4%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화장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집 내부에 화장실이 있다고 답하였다(97%). 혼자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43.9%였으며, 공동으로 함께 사용한다는 응답은 56.1%였다. 목욕시설 또한 응답자의 98.3%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100% 온수가 사용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52.9%는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96%는 부엌이 집에 있다고 하였으며 55.2%는 공동으로 부엌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난방시설(보일러, 전기장판 등)과 냉방시설(에어컨, 선풍기 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안전과 관련된 소방기구(소화기 스프링클러)의 유무

에 대해서는 단지 22.5%만 있다고 응답하여 77.5%의 응답자 거처의 재해위험에 대한 안전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현관 출입구 형태가 단독 출입구라는 응답은 73.5%였으며, 공동 출입구라는 응답은 26.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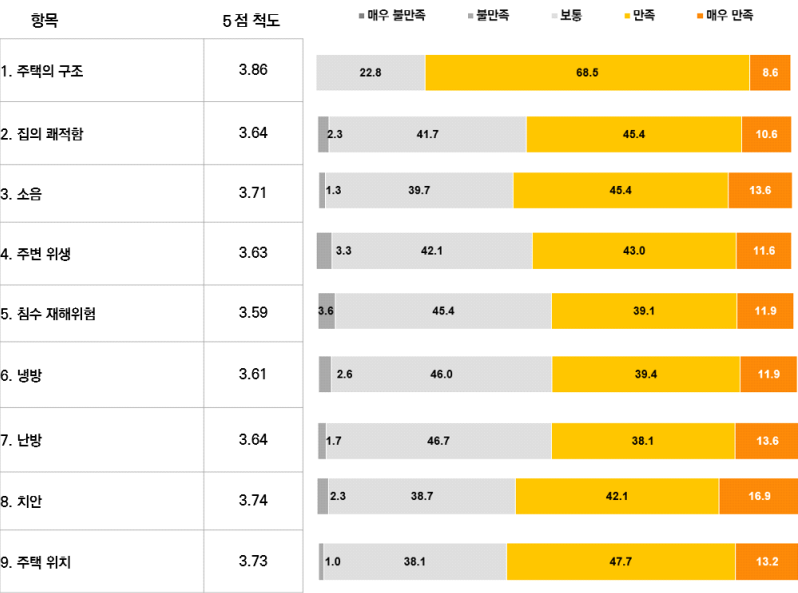
[그림 3-15] 거주하는 집의 상태

2. 3. 주거 만족도와 주거 인식

1)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거주하며 어떤 주택의 여건에 살고 있는지 확인 하였다면, 이번 장에서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집의 튼튼한 상태를 나타내는 ‘주택의 구조’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5점 만점에 3.86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대(3.93), 한국 거주 1년 미만(4.29), 상시 근로자(3.94), 회사 지원 거주(3.94) 및 E-9 비자 소지 근로자(3.97)의 주택의 구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곰팡이, 환기, 냄새, 햇빛 들어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집의 쾌적함’ 영역에서 3.64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점 척도에서 절대 값으로는 평균을 넘는 수준이지만 각 만족도 영역 값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집의 쾌적함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응답자 그룹으로 4050 그룹(약 3.3), 단기 근로자(3.41), 회사 미지원 거쳐 거주 응답자(3.47), H-2 비자 소지 응답자(3.56) 들어있다. 집 주변 시끄러움, 윗 집 쿵쿵거리는 소리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소음’의 만족도 지수는 3.71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소음에 불만족한 응답자 특성으로 50대 이상(3.36), 한국 거주기간 5년 이상(3.45), 단기 근로자(3.39), 회사 미지원 거쳐 응답자(3.44)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집 주변 냄새, 쓰레기 방치 상태를 나타내는 ‘주변 위생’에 대한 만족도는 3.6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4050 연령대 근로자(약 3.3), 한국 5년 이상 거주자(3.36), 단기 근로자(3.28)의 주거환경 주변 위생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응답자 그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비 많이 오면 집안에 물이 잠기는 등을 나타내는 ‘침수 재해위험’에 대한 만족도 값은 2.59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였다. 특히, 40대(3.43), 한국 거주기간 5년 이상(3.47), 단기 근로자(3.34), 회사 미지원 거쳐 거주자(3.37), H-2 비자 소지자(3.46)의 침수 위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이 여름에 너무 더운 정도를 의미하는 ‘냉방’과 집이 겨울에 너무 추운 정도를 의미하는 ‘난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61, 3.64로 낮게 나타났다. 냉방을 특히 불만족하게 나타낸 응답자 그룹은 40대(3.13), 단기 근로자(3.18), 회사 미지원 거쳐 거주자(3.23)이었으며, 난방을 특히 불만족한 그룹은 50대 이상(3.27), 단기 근로자(3.2)였다. 집에 도둑이 들거나 집주변 사건 사고의 위험을 의미하는 ‘치안’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3.74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치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그룹은 50대 이상(3.55), 한국 5년 이상 거주 응답자(3.58), 회사 미지원 거쳐 응답자(3.5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상점이 가깝고, 출퇴근의 지리적 편리함 등을 나타내는 ‘주택 위치’에 대한 만족도는 3.7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위치에 특히 만족하는 그룹은 20대(3.81), 한국거주 1년 미만 그룹(4.24), 상시 근로자(3.80), 회사지원 거쳐(3.87), E-9 비자 소지자(3.88)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체 만족도 점수는 3.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주거 만족도(3.81)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로 17.1%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 측면에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1년 미만이 4.18인 반면 5년 이상 거주자의 만족도는 3.31로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용상태에서도 상시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의 주거 만족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상시 근로자의 응답 점수는 3.82이며, 만족한다 55.2%, 매우 만족한다 14.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기 근로자의 주거 만족도는 3.16에 불과하였다.



[그림 3-16]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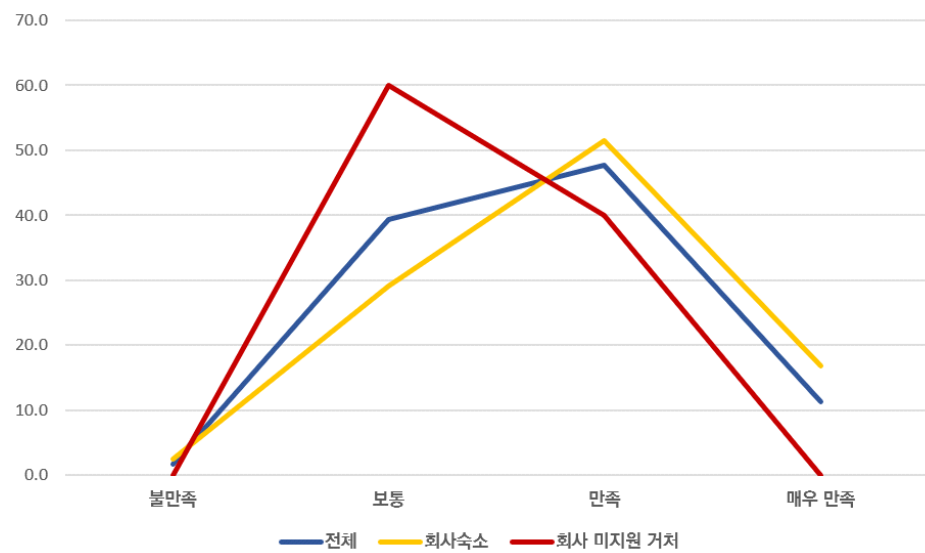
[표 3-14] 주택 특성별 만족도 (리커드 5점)

구분	사례수	주택의 구조	집의 쾌적함	소음	주변 위생	침수 재해위험	냉방	난방	치안	주택 위치
연령	전체	20대	3.86	3.64	3.71	3.63	3.59	3.61	3.64	3.74
		30대	3.93	3.77	3.75	3.72	3.60	3.65	3.74	3.82
		40대	3.84	3.58	3.72	3.60	3.62	3.66	3.60	3.66
		50대 이상	3.57	3.26	3.61	3.30	3.43	3.13	3.30	3.61
사업체 규모	전체	5인 미만	3.64	3.36	3.36	3.36	3.55	3.36	3.27	3.55
		5~30인 미만	3.83	3.59	3.72	3.57	3.62	3.56	3.71	3.62
		30~50인 미만	3.85	3.62	3.70	3.59	3.66	3.69	3.59	3.79
한국 거주 기간	전체	1년 미만	3.89	3.72	3.71	3.74	3.48	3.54	3.62	3.78
		1~2년 미만	4.29	4.26	4.03	4.35	3.71	3.94	3.94	4.12
		2~3년 미만	3.81	3.66	3.82	3.57	3.70	3.48	3.75	3.73
혼인 상태	전체	3~5년 미만	3.94	3.58	3.74	3.72	3.56	3.71	3.68	3.77
		5~10년 미만	3.84	3.65	3.62	3.44	3.56	3.68	3.57	3.63
		10년 이상	3.56	3.33	3.45	3.36	3.47	3.33	3.33	3.58
고용 상태	전체	기혼	3.88	3.81	3.65	3.79	3.88	3.67	3.56	3.85
		미혼	3.85	3.61	3.72	3.60	3.53	3.59	3.65	3.71
		상시 근로자	3.94	3.70	3.79	3.72	3.66	3.71	3.75	3.79
숙소 제공자	전체	단기 근로자	3.54	3.41	3.39	3.28	3.34	3.18	3.20	3.52
		회사	3.94	3.73	3.85	3.74	3.65	3.79	3.78	3.83
		그 외	3.70	3.47	3.44	3.41	3.47	3.23	3.35	3.55
체류 자격 (비자)	전체	E-9	3.97	3.70	3.88	3.77	3.69	3.73	3.79	3.83
		H-2	3.73	3.56	3.53	3.47	3.46	3.46	3.45	3.64
		그 외	3.71	3.71	3.14	3.43	3.86	3.57	3.57	3.29

[표 3-15] 전체 주거 만족도

	구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연령	전체	(302)	1.7	39.4	47.7	11.3	3.69
	20대	(152)	0.7	34.9	47.4	17.1	3.81
	30대	(116)	2.6	38.8	51.7	6.9	3.63
	40대	(23)	4.3	65.2	30.4	0.0	3.26
	50대 이상	(11)	0.0	54.5	45.5	0.0	3.45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0.0	40.0	48.9	11.1	3.71
	5~30인 미만	(122)	3.3	41.0	45.9	9.8	3.62
	30~50인 미만	(90)	1.1	36.7	48.9	13.3	3.74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0.0	17.6	47.1	35.3	4.18
	1~2년 미만	(67)	1.5	28.4	56.7	13.4	3.82
	2~3년 미만	(78)	0.0	35.9	55.1	9.0	3.73
	3~5년 미만	(68)	4.4	44.1	42.6	8.8	3.56
	5년 이상	(55)	1.8	65.5	32.7	0.0	3.31
혼인 상태	기혼	(52)	1.9	42.3	44.2	11.5	3.65
	미혼	(250)	1.6	38.8	48.4	11.2	3.69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1.7	29.0	55.2	14.1	3.82
	단기 근로자	(61)	1.6	80.3	18.0	0.0	3.16
숙소 제공자	회사	(202)	2.5	29.2	51.5	16.8	3.83
	그 외	(100)	0.0	60.0	40.0	0.0	3.40
체류자격 (비자)	E-9	(162)	1.9	27.2	54.3	16.7	3.86
	H-2	(133)	1.5	54.9	38.3	5.3	3.47
	그 외	(7)	0.0	28.6	71.4	0.0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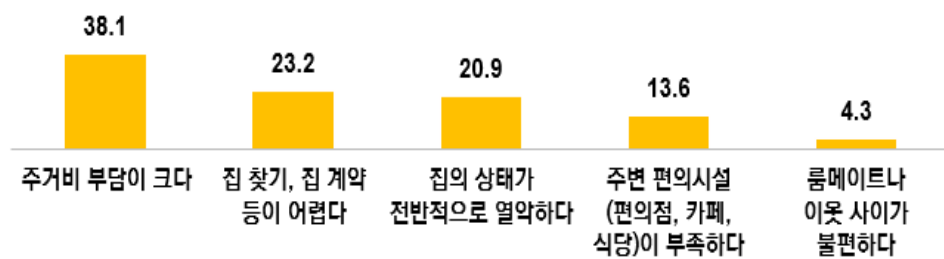
특히, 회사 제공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간의 주거 만족도 차이가 컸는데, 이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응답자와 회사 지원 숙소 거주 응답자의 경우 만족도 그래프의 추세가 ‘만족’ 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반면, 회사 미지원 거처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추세 결과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보통’ 내지 ‘불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7] 전체, 회사 지원 거주 별 주거 만족도

2) 주거 관련 어려움과 거주 의의(거주의 의미 or 경제적 의미)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 및 주거 관련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주거비 부담이 크다’ (38.1%)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거비와 연관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자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 찾기, 집계약 등의 어려움’(23.2%)이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의 상태 열악함’이 20.9%로 뒤를 이었다.



[그림 3-18] 거주지 관련 어려운 점(1순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그룹은 4050 그룹,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근로자, 한국 거주 1~3년차, 미혼 그룹, 회사 미지원 숙소 거주자, H-2 비자 소지 근로자 그룹이었다. 다음으로 집 찾기, 계약을 특히 어려웠던 그룹은 50대 이상, 기혼 응답자 그룹이었다. 집 상태의 열악함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어려웠던 그룹은 한국 거주 1년 미만 그룹, 단기 근로자 그룹이었다.

■ 거주 의의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측면과 주거의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더 높게 여기는지 확인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돈을 더 내더라도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데 동의하는 응답 비중(19.5%) 보다 그렇지 않다는 비중(80.5%)이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집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계속 거주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61%로 ‘아니다’는 응답 비중 39%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족스러운 주거환경보다 집의 경제적 측면, 즉 저렴한 주거비를 더 높은 가치로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6] 경제적 측면의 주거인식 결과

구분	그렇다		아니다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돈을 더 내더라도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59	19.5%	243	80.5%
현재 집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계속 거주할 것이다	174	61%	128	39%

응답 특성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거주 경제성 추구 경향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거주 1년 미만의 응답자 또한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돈을 더 낼 수 없다는 응답이 85.3%로 타 그룹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시 근로자에 비해 단기 근로자는 돈을 더 내더라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31.1%로 상시 근로자의 16.6% 보다 높았다.

[표 3-17] 응답자 특성별 거주지 관련 어려운 점(1순위)

구분	사례수	주거비 부담이 크다	집 찾기, 집 계약 등이 어렵다	집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룸메이트나 이웃 사이가 불편하다	
연령	전체	(302)	38.1	23.2	20.9	13.6	4.3
	20대	(152)	34.9	20.4	23.7	15.1	5.9
	30대	(116)	39.7	25.0	19.0	14.7	1.7
	40대	(23)	47.8	21.7	17.4	4.3	8.7
	50대 이상	(11)	45.5	45.5	9.1	0.0	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48.9	16.7	20.0	13.3	1.1
	5~30인 미만	(122)	27.9	33.6	22.1	11.5	4.9
	30~50인 미만	(90)	41.1	15.6	20.0	16.7	6.7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26.5	23.5	29.4	17.6	2.9
	1~2년 미만	(67)	49.3	22.4	16.4	11.9	0.0
	2~3년 미만	(78)	44.9	16.7	17.9	15.4	5.1
	3~5년 미만	(68)	26.5	26.5	20.6	16.2	10.3
	5년 이상	(55)	36.4	29.1	25.5	7.3	1.8
혼인 상태	기혼	(52)	28.8	46.2	17.3	5.8	1.9
	미혼	(250)	40.0	18.4	21.6	15.2	4.8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37.8	23.7	17.8	16.2	4.6
	단기 근로자	(61)	39.3	21.3	32.8	3.3	3.3
숙소 제공자	회사	(202)	31.7	21.3	22.8	18.8	5.4
	그 외	(100)	51.0	27.0	17.0	3.0	2.0
체류자격 (비자)	E-9	(162)	35.8	17.9	22.8	21.6	1.9
	H-2	(133)	42.1	27.8	18.8	3.8	7.5
	그 외	(7)	14.3	57.1	14.3	14.3	0.0

[표 3-18] 돈을 더 내더라도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응답 결과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302)	19.5	80.5
연령	20대	(152)	17.1	82.9
	30대	(116)	22.4	77.6
	40대	(23)	17.4	82.6
	50대 이상	(11)	27.3	72.7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21.1	78.9
	5~30인 미만	(122)	20.5	79.5
	30~50인 미만	(90)	16.7	83.3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14.7	85.3
	1~2년 미만	(67)	17.9	82.1
	2~3년 미만	(78)	15.4	84.6
	3~5년 미만	(68)	20.6	79.4
	5년 이상	(55)	29.1	70.9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16.6	83.4
	단기 근로자	(61)	31.1	68.9
숙소 제공자	회사	(202)	19.8	80.2
	그 외	(100)	19.0	81.0
체류자격(비자)	E-9	(162)	11.7	88.3
	H-2	(133)	27.8	72.2
	그 외	(7)	42.9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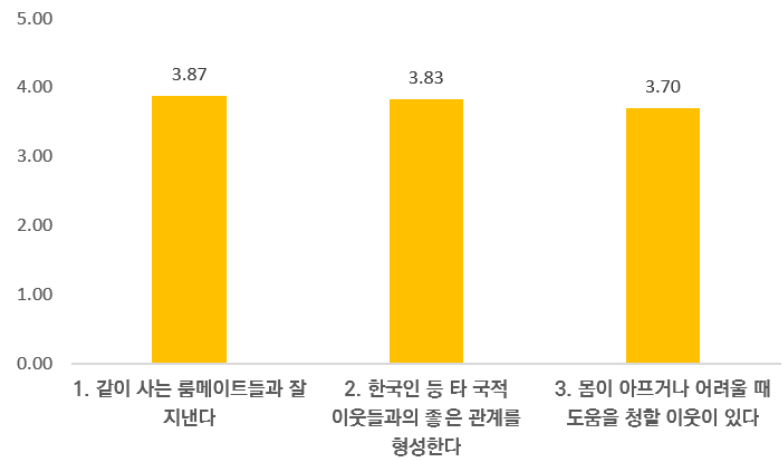
현재 집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강하게 응답한 그룹으로 40대, 한국 거주 5년 이상 그룹, H-2 비자 소지 그룹 등이 있다.

[표 3-19] 현재 집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계속 거주할 것이다 응답결과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302)	57.6	42.4
연령	20대	(152)	50.0	50.0
	30대	(116)	62.1	37.9
	40대	(23)	87.0	13.0
	50대 이상	(11)	54.5	45.5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60.0	40.0
	5~30인 미만	(122)	54.9	45.1
	30~50인 미만	(90)	58.9	41.1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20.6	79.4
	1~2년 미만	(67)	31.3	68.7
	2~3년 미만	(78)	56.4	43.6
	3~5년 미만	(68)	79.4	20.6
	5년 이상	(55)	87.3	12.7
혼인 상태	기혼	(52)	48.1	51.9
	미혼	(250)	59.6	40.4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57.3	42.7
	단기 근로자	(61)	59.0	41.0
숙소 제공자	회사	(202)	61.4	38.6
	그 외	(100)	50.0	50.0
체류자격(비자)	E-9	(162)	45.1	54.9
	H-2	(133)	72.2	27.8
	그 외	(7)	71.4	28.6

3) 이웃과 지역사회 교류 수준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함께 사는 룸메이트,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와의 관계도 잘 지낸다는 응답이 3.87로 높은 동의도를 나타내었으며, 한국인 등 타 국적 이웃들과도 잘 지낸다는 응답이 3.83으로 높게 나타났다. 몸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다는 응답이 3.70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그림 3-19] 이웃과의 사회적 수준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사회적 관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혼에 비해서 기혼의 응답자가 이웃 관계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단기 근로자에 비해 이웃 관계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지원 숙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회사 미지원 거처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이웃 사회 관계성이 더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0] 응답 특성별 이웃과 지역커뮤니티 사회적 수준

구분		사례수	같이 사는 룸메이트들과 잘 지낸다	한국인 등 타 국적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몸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다
전체		(302)	3.87	3.83	3.70
연령	20대	(152)	3.88	3.93	3.75
	30대	(116)	3.87	3.81	3.65
	40대	(23)	3.83	3.57	3.65
	50대 이상	(11)	3.89	3.18	3.55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3.85	3.72	3.59
	5~30인 미만	(122)	3.85	3.80	3.74
	30~50인 미만	(90)	3.92	3.98	3.74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4.00	4.35	4.15
	1~2년 미만	(67)	3.78	3.81	3.73
	2~3년 미만	(78)	3.89	3.77	3.71
	3~5년 미만	(68)	3.84	3.84	3.62
	5년 이상	(55)	3.90	3.62	3.45
혼인 상태	기혼	(52)	3.97	3.90	3.79
	미혼	(250)	3.85	3.82	3.68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3.88	3.89	3.76
	단기 근로자	(61)	3.83	3.59	3.46
숙소 제공자	회사	(202)	3.91	3.96	3.77
	그 외	(100)	3.79	3.58	3.54
체류자격(비자)	E-9	(162)	3.91	3.96	3.83
	H-2	(133)	3.82	3.68	3.55
	그 외	(7)	4.00	3.71	3.29

전반적으로 룸메이트와 이웃 사이의 관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타 국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56%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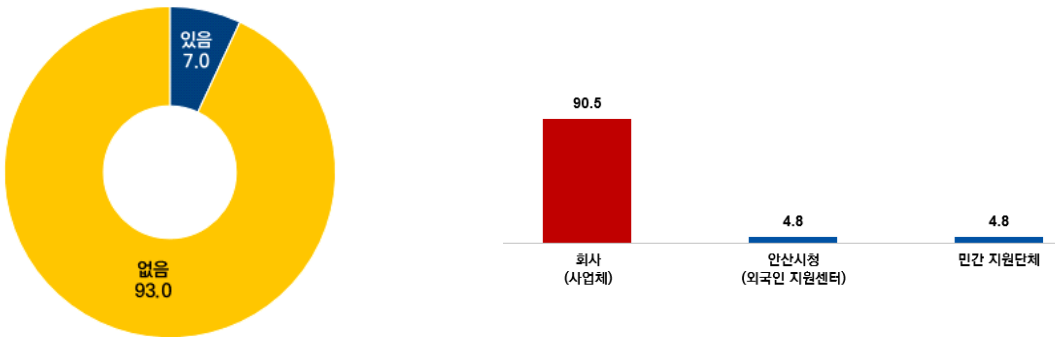
[그림 3-20] 인종차별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2. 4. 정책 요구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조사의 마지막 파트인 주거지원 정책 수요 부분의 조사결과는 크게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과 주거 공간의 수요’ 부분과 ‘공공임대주택 인식 및 입주의향’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정책적 수요(주거 상담, 필요로 하는 주거정책, 주거 공간의 수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많은 도움과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위해 주거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3%의 응답자는 ‘상담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답하였다. 대신에 대부분의 주택 관련 상담은 회사(사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이사를 위한 주거상담 여부(왼쪽), 상담 받은 장소(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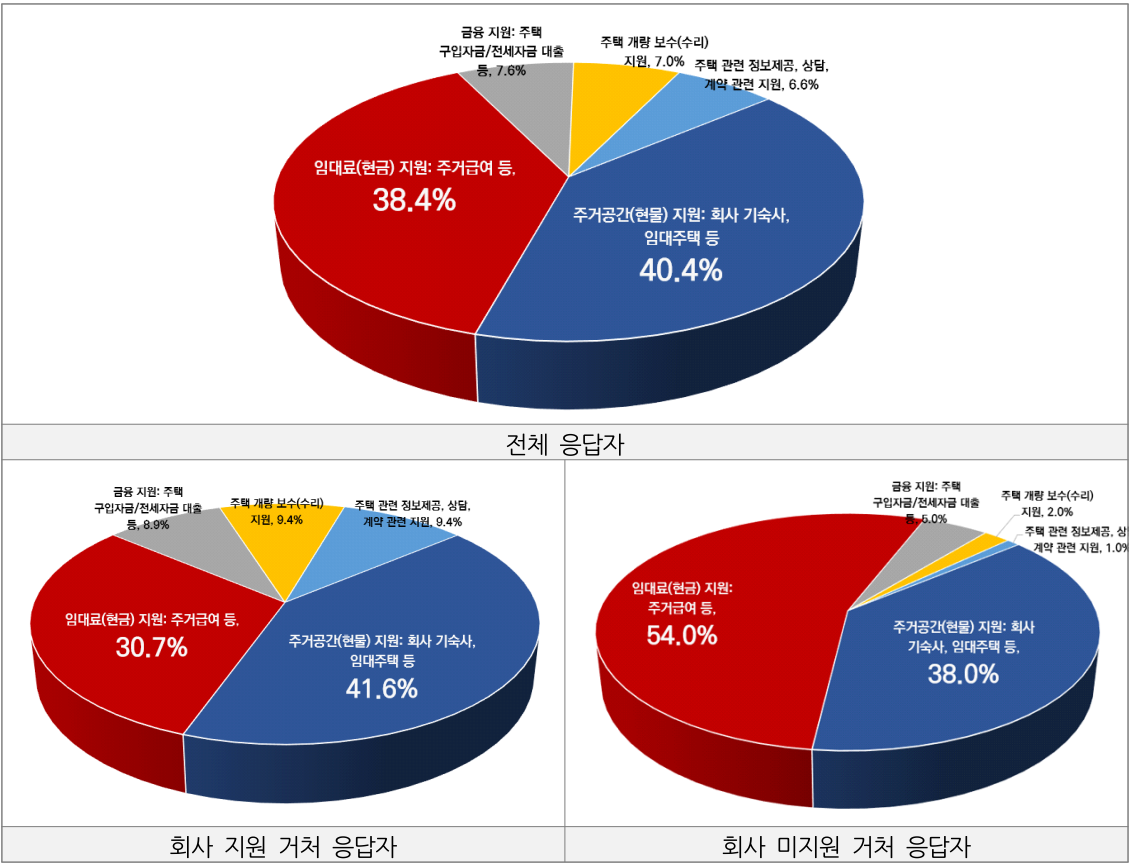


[그림 3-22]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1순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결과로, 40.4%의 응답자들이 ‘주거공간(현물)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임대료 등 현금지원에 대한 응답이 38.4%로 뒤를 이어 나타났다. 주택 관련 정보제공이나 상담 등에 대한 지원에 관련 하여 6.6%의 응답자 비중만이 필요로 한다고 하였는데, 주거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93%)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택 관련 상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하는 거처(공간)과 주거비(현금)에 대한 시급성,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주거 마련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 지원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소속된 사업체에서 주거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 결과를 살펴보면, 회사 기숙사 및 임대주택의 주거공간 지원을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그룹으로 50대 이상, 한국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응답자, 미혼, H-2 비자 소지 근로자 그룹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주요한 주거지원 정책의 수요로 주거급여 등 임대료(현금) 지원을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그룹으로 50대 이상 그룹, 30~50인 미만 규모 사업체 종사자 근로자, 한국 거주 1년 미만 그룹, 기혼 그룹, 단기 근로자 그룹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 지원 숙소에 거주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 간에 차이가 유효하게 나타났다. 회사 지원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을 41.6%로 현금 지원(30.7%)보다 더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회사에서 지원 받는 숙소에 대해서 만족한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지속적인 회사 기숙사나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받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회사 미지원 거처 응답자의 경우 주거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원하는 응답율이 54%로 과반을 넘었다. 이는 현재 그들이 감당하는 민간 영역의 주거비(보증부 월세 기준 평균 1,400만원 보증금에 월세 35만 원 수준)가 부담이 되어 주거비를 직접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3] 회사 지원 유무별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1순위)

[표 3-21] 응답 특성별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1순위)

구분	사례수	주거공간(현물) : 회사 기숙사, 임대주택 등	임대료(월금) : 주거급여 등	금융 지원 :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개량 보수(수리) 지원	주택 관련 정보제공, 상담, 계약 관련 지원, (통역 서비스 등)
연령	전체	(302)	40.4	38.4	7.6	6.6
	20대	(152)	42.1	33.6	8.6	6.6
	30대	(116)	37.1	41.4	7.8	7.8
	40대	(23)	43.5	47.8	4.3	4.3
	50대 이상	(11)	45.5	54.5	0.0	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40.0	36.7	4.4	7.8
	5~30인 미만	(122)	45.1	38.5	9.0	3.3
	30~50인 미만	(90)	34.4	40.0	8.9	6.7
	1년 미만	(34)	32.4	44.1	14.7	0.0
한국 거주기간	1~2년 미만	(67)	37.3	41.8	6.0	4.5
	2~3년 미만	(78)	34.6	39.7	7.7	11.5
	3~5년 미만	(68)	50.0	27.9	7.4	8.8
	5년 이상	(55)	45.5	41.8	5.5	3.6
	기혼	(52)	36.5	48.1	9.6	3.8
혼인 상태	미혼	(250)	41.2	36.4	7.2	7.2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40.2	34.4	8.7	7.9
	단기 근로자	(61)	41.0	54.1	3.3	1.6
체류자격 (비자)	E-9	(162)	32.1	39.5	8.6	9.3
	H-2	(133)	48.1	38.3	6.8	3.8
	그 외	(7)	85.7	14.3	0.0	0.0

다음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외국인 응답자들의 수요를 확인하였다.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공간(방)에 대한 수요는 5점 만점 4.06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룸메이트를 구성할 때 같은 국가 인종끼리만 선호 하는지 그 선호도를 확인한 결과 3.82 수준으로 낮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는 3.9 수준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22] 응답자 특성별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리커트 5점)

구분		사례수	독립된 주거공간(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국가 인종끼리만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전체		(302)	4.06	3.82	3.90
연령	20대	(152)	4.09	3.88	3.88
	30대	(116)	4.07	3.80	3.98
	40대	(23)	3.83	3.65	3.83
	50대 이상	(11)	4.00	3.64	3.45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90)	4.08	3.78	3.83
	5~30인 미만	(122)	4.10	3.84	3.93
	30~50인 미만	(90)	3.99	3.84	3.91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4.32	3.82	4.18
	1~2년 미만	(67)	3.88	3.66	3.69
	2~3년 미만	(78)	3.94	3.73	3.79
	3~5년 미만	(68)	4.19	3.96	4.06
	5년 이상	(55)	4.13	3.98	3.93
혼인 상태	기혼	(52)	4.08	3.88	4.02
	미혼	(250)	4.06	3.81	3.87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3.98	3.81	3.91
	단기 근로자	(61)	4.39	3.87	3.84
숙소 제공자	회사	(202)	4.10	3.91	4.01
	그 외	(100)	3.98	3.64	3.67
체류자격(비자)	E-9	(162)	4.07	3.77	3.91
	H-2	(133)	4.05	3.88	3.89
	그 외	(7)	3.86	3.86	3.86

2) 공공임대주택 수요(인지와 입주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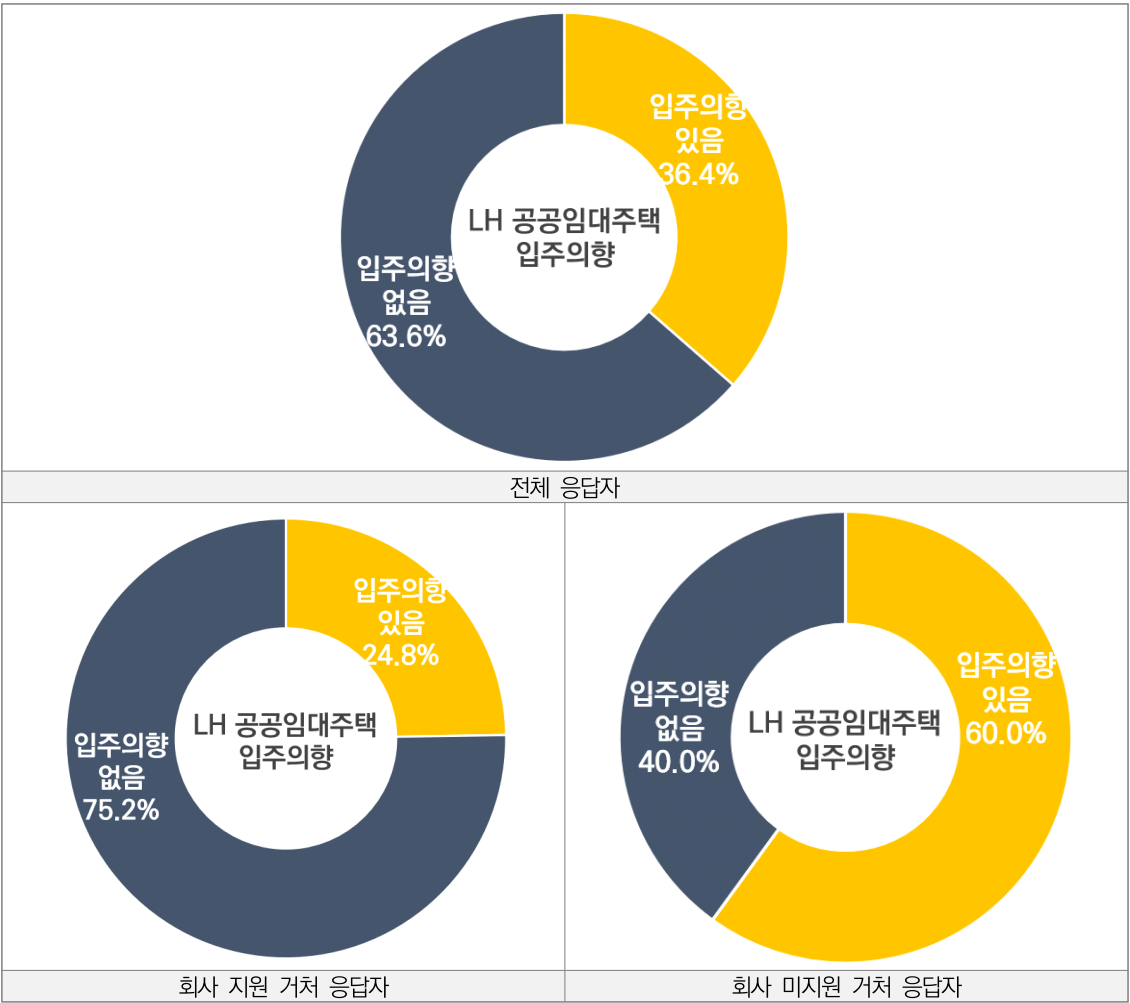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을 알고 있는지 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92.7%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국내 근로중인 외국인이나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과 LH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자체나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36.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입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을 살펴보면, 4050 중장년층 응답자, 한국 거주 5년 이상, 단기 근로자 그룹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3] 응답자 특성별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02)	36.4	63.6
연령	20대	(152)	33.6	66.4
	30대	(116)	33.6	66.4
	40대	(23)	60.9	39.1
	50대 이상	(11)	54.5	45.5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34)	26.5	73.5
	1~2년 미만	(67)	38.8	61.2
	2~3년 미만	(78)	33.3	66.7
	3~5년 미만	(68)	29.4	70.6
	5년 이상	(55)	52.7	47.3
고용 상태	상시 근로자	(241)	30.3	69.7
	단기 근로자	(61)	60.7	39.3
체류자격(비자)	E-9	(162)	34.0	66.0
	H-2	(133)	38.3	61.7
	그 외	(7)	57.1	42.9

특히, 회사지원 거처에 거주하는 외국인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의 입주 의향 결과가 차이를 보였다. 회사 지원 거처에 거주하는 외국인 응답자의 경우 24.8% 수준으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회사 미지원 거처 거주 응답자의 경우 60% 수준으로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3-24]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3. 소결 및 시사점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핵심 이슈별로 정리 하였다. 먼저 한국 생활 및 고용 환경측면에서,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환경과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의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는 단기 근로자보다,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한국생활과 고용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정착 초기에는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지만 장기 체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단기 근로자나 미혼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 생활 정착과 고용환경에서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주거 여건과 실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빌라 유형)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직장 동료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일부(14%)는 고시원, 조립식 패널 건축물, 컨테이너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은 연령, 거주 기간,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장기 체류자에 비해 단기근로자는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에서 지원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가 근로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회사 거처에 거주하는 근로자 중 22.8%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회사 미지원 거처에 거주하는 근로자 중 단지 2%만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차이는 회사 지원 거처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반 고용허가제 비자인 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의 절차상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처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들의 주거 생활 안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만족도와 주거 인식 측면에서, 이들은 주거 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회사 숙소가 저렴하고 안정적

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E-9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서 거처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들의 주거 생활 안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큰 우선순위로 작용하여, 현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수하더라도 저렴한 거처에 만족하고 거주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지원 정책 수요 및 요구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는 한국에서 주거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주로 소속된 사업체에게 주거 상담 및 지원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주거 공간(현물) 지원(40.4%)과 임대료(현금) 지원(38.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 상담보다 실질적인 거주 공간과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됨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92.7%)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의향은 36.4%이며 고령자, 장기 거주자, 단기 근로자에서 입주 의향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사에서 지원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24.8%만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었던 반면, 회사 지원이 없는 거주자 중 60%가 입주 의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회사 미지원 거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더 큰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한국 장기 체류자와 2030 근로자, 회사 숙소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만족도, 고용환경의 여건, 주거 환경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 조성,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 지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부족했으나, 복지관의 설립으로 이 문제들이 다소 해결되었다. 복지관 건립은 2013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단지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었다.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기숙사 사례는 국비와 시비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 사례이다. 부산시가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공동기숙사를 공급한 사례이다(부산시보, 2016).

2) 전북 익산시 희망하우스

전북 익산시의 희망하우스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한 사례이다. 희망하우스 사업은 빈집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기본 골자로 한다(익산시, 2023). 이 사업은 농촌지역 빈집 및 공가를 대상으로 하며, 6동의 빈집을 대상으로 2023년에 진행되었다. 동당 최대 25,000천원의 예산 지원을 받으며, 대상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부양자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희망하우스의 목적은 빈집을 화장실, 주방, 창, 문, 단열/도배/장판, 보일러, 지붕, 천장, 전기 등을 포함하여 리모델링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주거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mp/202204212240Y>

[그림 4-2] 전북 익산시 희망하우스 사업 전(위)과 후(아래)

익산시는 빈집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주자 선정에 대한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고 건물주와의 별도 협약 체결로 4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시 임대자가 직접 지정 가능한 구조이다. 사업의 진행절차는 수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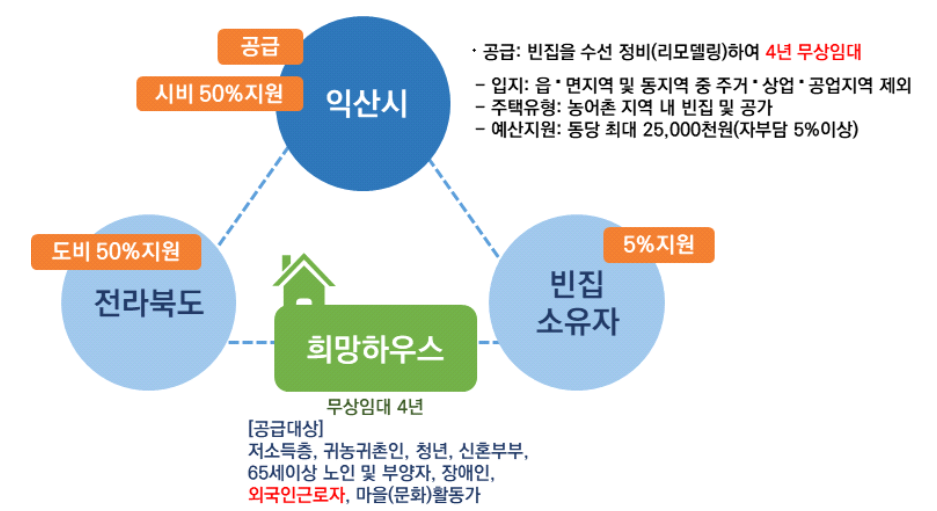


출처 : <https://www.busan.go.kr/news/snsbusan03/view?dataNo=57115>

[그림 4-1]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미지들

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 여부, 소유주의 무상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임차인 모집 및 확정(시) → 시장과 건물주간 협약체결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빈집 수선 → 보조금 교부 → 입주 순서로 진행된다. 희망하우스 공급 모델 구조는 아래 이미지와 같으며, 동당 최대 25,000천원이 지원되며(시비 50%, 도비 50%), 자부담 5% 이상으로 구성된다.

전북 익산시 희망하우스 사례의 시사점은 광역도 지역과 기초지자체가 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4년 무상임대로 공급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높이고 노동력 수급 탄력성을 제고했다는데 그 시사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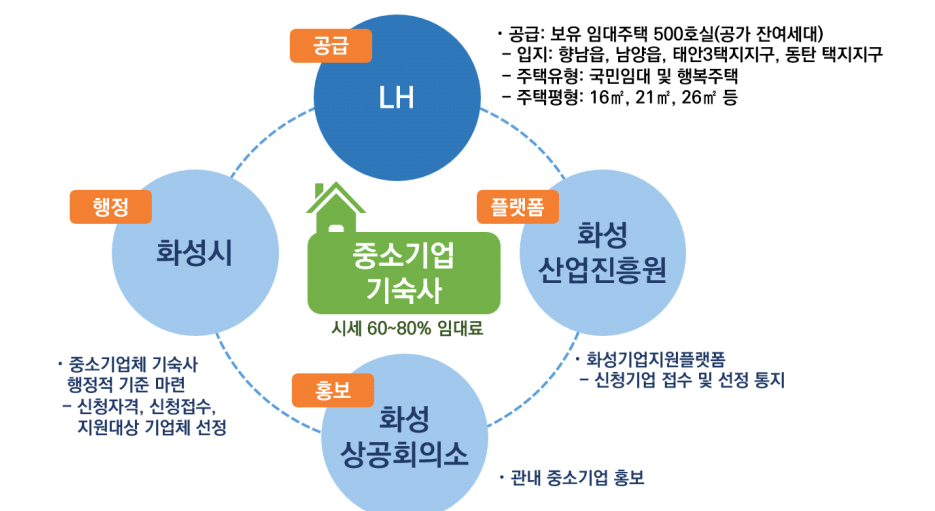


[그림 4-3] 전북 익산시 희망하우스 사업 구조. 저자 작성

3) 화성시-LH 중소기업 기숙사 공급 모델

화성시-LH 중소기업 기숙사 공급 사례는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공급 사례는 아니지만,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주거지원 모델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참고 하고자 하였다. 이 모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상 외국인을 공급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LH가 근로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 및 사업체와 계약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본 기숙사 공급 모델은 경기도 화성시·LH경기남부지역본부가 MOU를 맺고,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며, 이 모델로 LH 보유 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였다(LH 내부자료). 민·관이 협력하여 공급한 중소기업 공동 기숙사 모델은 근무여건 및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향남읍, 남양읍, 태안3 택지지구, 동탄 택지지구에 위치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의 공가 잔여세대를 기숙사로 활용하였다. 사업 절차는 2023년 6월 업무협약, 7월 입주기업체 모집공고, 9월 입주로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체와 LH 간의 계약을 통해 입주가 이루어진다. 임대료 납부 및 보증은 계약당사자인 기업체가 담당하며, 화성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숙사 선정을 위한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고, 화성산업진흥원은 화성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신청기업 접수 및 선정여부를 통지하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화성 상공회의소는 관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를 통한 홍보를 담당한다. LH와 사업체 간 계약을 진행하고, 지자체 및 유관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이루어 근로자 기숙사를 공급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4] 화성시 LH 중소기업 기숙사 공급 모델,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내부자료 기반 저자작성

1. 2.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법률 사례

1) 서울행정법원의 난민 전세임대주택 신청 판결

외국인이 국내 주거복지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적 사례가 있었다(법률신문, 2021).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1월, 난민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2020구합78100)]. 이 판결은 난민 A씨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이어진 사례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동 국가에서 온 A씨는 입국한 후 2018년 법무부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관악구에서 거주하던 A씨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A씨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였다. 그러나 관악구청장은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A씨의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의 권리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난민법」 제31조는 난민 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것을 규정한다. 난민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봉쇄되어서는 안 되며, 협약에서 보장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 A씨에게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본 판례는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례이다. 다만, 난민과 체류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간 법적 지위와 정책 대상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외국인 대상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깊이 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74773>

[그림 4-5] 관악구 난민 공공임대주택 대상 판례 이미지

2) 경기도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농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전국 최초로 도내 농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근로·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경기도 농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숙행씨법'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 '숙행' 씨의 사망 사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 문제가 부각되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농업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며,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농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장 및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인권보장 지원, 근로환경 지원, 주거환경 지원 등을 포함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지원에는 기숙사 건립,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업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농촌 인력수급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 농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사례는 기초 지자체나 광역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법적 대상 포함 및 근거 조항을 마련 사례이다. 부산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외국인 근로자 공동기숙사 공급의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각 지방정부와 기초지자체가 조례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적인 주거지원의 법적 토대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2.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주거지원 고려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거비에 높은 민감성을 보였으며, 양질의 저렴한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 공동체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그리고 주거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LH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내국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본 장에서 살펴보았던 부산시, 화성시, 익산시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와 사업체 및 LH의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기숙사 사례와 익산시 희망하우스 사례와 같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한 직접적인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공간 공급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경기도·안산시는 산업단지 사업체 기숙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통합지원(주거·인권·노동 등 사례관리)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담당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최근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도입 활성화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고용노동부(2023)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고용허가 시 우대(고용한도 상향 검토, 선발 가점부여 등) 추진하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LH는 산업단지 사업체와 계약을 통한 간접적인 주거지원 방식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당 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입주민 선정·관리 및 임대료 납부와 보증의 주체를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산단 기업들이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서비스에 신청하고 접수할 수 있는 기업지원 플랫폼 구성 및 운영·관리 역할을 안산시 상공회의소 등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주거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 개정 논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내국인들 가운데에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 살펴본 외국인 주거지원과 관련한 법률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서는 난민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 판결은 외국인 국적인 난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보장하고 협약에서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농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기숙사 건립 및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원 등이 조례에 포함되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사례로, 안산시 등 다른 지방정부와 기초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와 안산시 등 지자체 차원의 법률 및 조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산시에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보인다(그림 4-6). 안산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민청 신설 논의와 더불어 2023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우대하며 공공기숙사도입을 장려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2023.7.14.) 해당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고용허가제 시 우대 추진(고용한도 상향 검토, 선발 가산점 부여 등)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고용허가제 시 우대를 추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지원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내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산업에 미치는 중요도나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안산시는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례개정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열악한 조건의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검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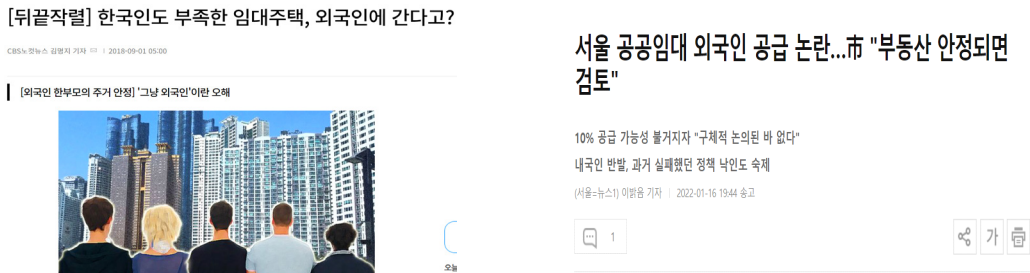
<p>[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p> <p>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인권보장 지원</p> <p>가. 인권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p> <p>나.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p> <p>다.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p> <p>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p> <p>2. 근로환경 지원</p> <p>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p> <p>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p> <p>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목적 공간 마련</p> <p>라. 필수 장비 구입 지원</p> <p>3. 주거환경 지원</p> <p>가. 기숙사 건립</p> <p>나.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p> <p>다. 지역 숙박시설 지정</p> <p>라. 숙소 임대료 지원</p> <p>-중략-</p> <p>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p> <p>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p> <p>2. 고충·생활 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p> <p>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p> <p>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p> <p>5.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p> <p>6.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교육사업 [신설 2020.11.12.]</p> <p>7.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p> <p>[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 <p>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p> <p>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p> <p>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p> <p>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p> <p>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p> <p>6.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교육사업</p> <p>7.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p> <p>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

[그림 4-6]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좌),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주거지원 관련 조항 (우)

■ 포용적 시민의식과 상호문화주의 전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복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 및 의식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림 4-7).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인구 비중을 보이는 안산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러한 측면에서의 논의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안산시는 다문화 도시에서 상호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최초로 가입하기도 하였다(송창식, 2021a). 이러한 전환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사회적 포용성과 상생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들 간의 상호관계성과 서로에 대한 이해 및 포용을 중시하며, 단순히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송창식, 2021b).

안산시에서 실시한 외국인 주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문화주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영준·강지영, 2023). 조사 결과, 이주민은 자신과 선주민 간에 상호 신뢰가 있다고 느끼지만, 선주민 중 다수는 이주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호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선주민들은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주거 및 복지 지원 정책에 대해 의견에 찬반이 갈리며, 이주민을 동등한 이웃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책 확대와 선주민의 수용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024877>(좌) <https://www.news1.kr/articles/?4556083>(우)

[그림 4-7] 외국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여론과 관련된 기사 이미지

안산시가 상호문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은 문화 간의 상호관계성을 갖고 서로 변화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시설 및 공간, 경제 및 공동체, 교육 및 공동체, 법 및 제도 분야에서의 수용성 확대 방안, 상호문화 이해 및 교류 공간 확충,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 방안, 다언어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강화, 차별금지의 제도화 및 주민 의식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은 안산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고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호문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포용과 상생 문화를 더욱 깊이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mp/202005060956a>

[그림 4-8] 상호문화도시 안산 이미지



[그림 4-9]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2018년 이후 국내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안산시는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안산시 인구 중 12.9% 이상이 외국인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월 및 시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그들의 삶과 주거환경은 정책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력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안산시 등 산업계 현장에서 이들의 빈자리가 커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단지 내 영향력과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산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자 하였다.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여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는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302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기본문항, 생활 및 고용환경, 주거 여건, 정책 요구도와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는 한국생활 및 고용 환경, 주거 여건과 실태, 주거 인식과 만족도, 정책적 요구 4개 이슈로 재분류되어 분석 및 정리되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생활 및 고용환경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생활 만족도를 보였지만 장기 체류 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기 체류 시 생활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 인식이 증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상시 근로자와 기혼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장기 체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주거 여건과 실태 측면에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며, 직장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 지원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는 회사 숙소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일 수 있다. E-9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서 거처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들의 주거 생활 안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 만족도와 주거 인식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은 주거 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회사 지원이 없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관련 수요가 실질적인 거주 공간과 주거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원 정책 수요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주거 상담을 받지 못하고, 주거 관련 문제에 대해 주로 소속된 사업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은 주거 공간 제공(40.4%)과 임대료 지원(38.4%)이며, 이는 주거 상담보다 실제 거주 공간과 주거비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더 큰 주거비 부담을 느끼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국내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관련 사례들을 토대로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업체·지자체·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구조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LH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사업체와 계약을 통한 간접적인 주거지원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와 안산시 등 지자체 차원의 법률 및 조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어촌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주거불안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정책 고려에 앞서 포용적 시민의식, 지역 상생, 상호문화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과의 협력, 공존, 상생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상당히 선진화된 도시이다. 현재 안산시는 다문화 도시에서 상호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사회적 포용성과 상생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안산시의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은 안산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고려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외국인주민과 근로자들에 대한 포용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중요한 것은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를 ‘인력’으로 간주하기보다 ‘인간’으로 여기고, 그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그들의 ‘주거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상생과 화합의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라보고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주거 수요와 제도적 상황을 검토하여 주거지원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302명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생활 및 고용 환경, 주거 여건과 실태, 주거 인식과 만족도, 정책적 요구 4개 분야에 유의미한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언어적 한계로 인한 조사의 깊이에 대한 아쉬움이다. 100개국을 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였다.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도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3가지 버전을 준비하였으나 100% 만족한 의사소통과 조사결과의 질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인터뷰 진행에 있어서도 언어의 장벽이 높아 심층적인 내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 다만, 외국인 주민들의 인권 지원이나 실무 및 연구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이러한 아쉬운 부분을 간접적으로 채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의 한계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의 구체화 단계 논의에 돌입하지 못한 점이다. 앞서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부문은 담당 부처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고 LH 내부에서나 안산 시청에서도 정확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확립되어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당히 민감한 여론과 사회적 인식에 직면할 수 있는 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외국인 주택공급 논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로 둔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들의 ‘주거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에 본 연구의 의미를 둔다.

참고문헌 Reference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코로나19대응,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력 안전하고 유연하게 도입,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준, 강지영(2023), 안산시 지역균형발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안산환경재단.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22),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23), 2023년 9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23), 2023년 10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률신문(2021), “[판결] 체류 난민도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12월 3일 기사
부산시보(2016), “사하구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부산이라 좋다, 제1758호.

송창식(2021a),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대응 전략: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안산환경재단.

송창식(2021b), “글로벌 상호문화도시 안산시로의 도약을 위한 시작”, 정책칼럼, 안산환경재단.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2016),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요조사

심미승, 박지현(2021), 코로나 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삶에 대한 탐색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6(3), 49-59.

안산시 통계(2023), 2023년 10월말 외국인 등록 현황

안산시 최산통계(2023), 2023년 안산시 동별(외국인 포함) 및 연령별(외국인 미포함)인구

엄진영(2020), 코로나 19 와 농업 고용노동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21.

이수연(2022),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사회법연구, 46, 71-116.

익산시 보도자료(2023), “익산시, 농촌빈집 귀농귀촌 희망하우스로 변신”.

정동재, 윤영근, 염지선(2022), 데니즌ships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최영미(2020), 글로벌 재앙, 코로나19와 이주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계청(2022),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https://www.hankyung.com/amp/202005060956a>

SQ7. 귀하는 현재 혼인 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7-1 (기혼인 경우) ① 가족이 함께 한국 내 거주 ② 귀하만 한국 거주

SQ8. 내 집이 있는 '자가'의 경우 제외

I. 생활 및 고용환경

1. 귀하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전반적인 한국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처음에 한국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① 유학, 어학연수 등 공부 목적 ② 결혼 ③ 일하기 위해

3. 귀하는 한국어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	어렵다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가 소속된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문항입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안전이 확보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월급(보수 수준)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받는다(임금체불 없음)	①	②	③	④	⑤
5) 근로 시간이 잘 지켜진다(과도한 야근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본국(고향)으로 송금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회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I. 주거 여건

*주로 거주하는 집(일주일에 4일 이상)을 기준으로 응답하세요.

1.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두 선택하고, 각각 몇 명인지 써넣어 주십시오.

구분	해당 여부	성별 및 인원수	
		남자	여자
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명	()명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아래 응답			
② 배우자	① 있다 ② 없다	()명	()명
③ 자녀	① 있다 ② 없다	()명	()명
④ 부모 형제 등 혈연관계	① 있다 ② 없다	()명	()명
⑤ 직장 동료	① 있다 ② 없다	()명	()명
⑥ 친구 등 기타 동거인	① 있다 ② 없다	()명	()명

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구분	해당 여부
① 회사(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기숙사)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② 민간 협회 및 지원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아파트 ② 일반 주택 (연립, 다세대 등) ③ 그 외(주택이 아닌 거처) ④ 기타()

*주택 유형을 잘 모를것이기 때문에 ①아파트, ②일반주택, ③비주택 으로 구분하고,
특히 비주택에서는 그림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참고)일반주택 유형 이미지 제공

3-1. ③번 ‘주택이 아닌 거처’의 경우 선택하시오

I 다중생활시설	II 숙박업소	III 일터의 일부공간	
			
고시원 ()	여관, 모텔 ()	작업장 창고, 사무실 내 일부 공간 ()	
IV 가설 건축물			V
			기타 ()
컨테이너 ()	비닐하우스 ()	조립식 패널건축물 ()	

3-1. 살고 있는 집의 위치에 해당되면 응답해주세요.

- ① 지하(반지하) ② 건물옥상(옥탑방) ③ 지상층

3-1. 살고 있는 집의 입지에 해당되면 응답해주세요.

- ① 산업단지 내 ② 산업단지 인근(안산시 내) ③ 안산시 외부 지역

4. (문2. 회사제공 숙소가 아닌 경우)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전세 ② 월세 ③ 무상(부모, 친지, 친구 제공)

5. 주거비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 숙소 아님) 전월세의 경우

구분	금액		
1) 전세	전세보증금	억	만원
2) 월세	보증금	억	만원
	월세(관리비 포함)	매월	만원

* (회사숙소)회사에 매달 주거비로 돈을 내거나 월급에서 차감하나요?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납부하거나 차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매월 _____만원

6. (무상 제외) 주거비관련 (보증금, 집세, 공과금, 관리비 등) 지출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부담스러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7. 현재 주택에는 언제부터 거주하셨습니까?

거주 시작 시기 _____년 _____월

8.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 ① 친구/ 친지 등의 도움 ② 회사 도움 ③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통해
④ 외국인 노동자 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서
⑥ 기타()

9. 귀하가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②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아서 ③ 집세를 아낄 수 있어서
④ 교통이 편리해서 ⑤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아서 ⑥ 기타()

10.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시설 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종류	보유 수
방	①원룸형 ② 방 1개 ③ 방 2개 ④ 방 3개 ⑤ 방 4개 이상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거실	① 있다 ② 없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화장실	① 있다 ② 없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① 주택 내 ② 주택 외
목욕시설	① 있다 ② 없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① 따뜻한물 나눔 ② 따뜻한물 안 나눔
부엌(독립형태)	① 있다 ② 없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난방시설	① 있다(보일러, 전기장판 등) ② 없다
냉방시설	① 있다(에어컨, 선풍기 등) ② 없다
소방기구	① 있다(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② 없다
출입구	① 단독 출입구 ② 공동 출입구

11.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구분	매우불만			매우만족	
1) 주택의 구조(집의 튼튼함 상태)	①	②	③	④	⑤
2) 집의 쾌적함(곰팡이, 환기, 냄새, 햇빛 들어오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3) 소음(집 주변 시끄러움, 윗 집 쿵쿵거리는 소리)	①	②	③	④	⑤
4) 주변 위생(집 주변 냄새, 쓰레기 방치 상태)	①	②	③	④	⑤
5) 침수 재해위험(비 많이 오면 집안에 물이 잠기는 등)	①	②	③	④	⑤
6) 냉방(집이 여름에 너무 더운 정도)	①	②	③	④	⑤
7) 난방(집이 겨울에 너무 추운 정도)	①	②	③	④	⑤
8) 도둑 등 치안(집에 도둑이 들거나 집주변 사건 사고의 위험)	①	②	③	④	⑤
9) 주택 위치(상점 가깝고, 출퇴근 편리한 위치 등)	①	②	③	④	⑤
10) 거주하는 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의 주거 관련 어려움을 말씀해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집 찾기, 집 계약 등이 어렵다
- ② 주거비 부담이 크다
- ③ 룸메이트나 이웃 사이가 불편하다
- ④ 집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 ⑤ 주변 편의시설(편의점, 카페, 식당)이 부족하다.
- ⑥ 기타()

13. 귀하의 주거 인식에 대한 질문

구 분	그렇다	아니다
1) 돈을 더 내더라도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①	②
2) 현재 집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계속 거주할 것이다.	①	②

14.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거처에 거주하실 계획입니까?

- ① 예(14-1로)
- ② 아니오

14-1. 거처를 옮길 생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하는 곳이 바뀜(이직, 전근, 재취업 등)
- ② 주택 구입
- ③ 더 저렴한 곳으로 가기 위해
- ④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 ⑤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 ⑥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기 위해
- ⑦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비자 등)
- ⑧ 기타 ()

15. 향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선호하는 주거입지는 어디입니까?

- ① 산업단지 내
- ② 산업단지 인근(안산시 내)
- ③ 안산시 외부 지역

16. 주거환경 내 이웃과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적 관계 수준은 어떠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만)같이 사는 룸메이트들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인 등 타 국적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몸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한국 생활하면서 겪은 부정적 사회 경험과 인식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타 국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집에 있을 때 너무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음식, 생활방식 등 문화적 차이로 한국살이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Ⅲ. 정책 요구도

1. 귀하는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찾거나, 이사를 위한 다른 집을 찾기 위해 관련 정보제공 및 주거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1-1로)
- ② 아니오(2로)

1-1.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디서 서비스를 받으셨나요?

- ① 동 주민센터
- ② 안산시청(외국인 지원센터)
- ③ 회사(사업체)
- ④ 민간 지원단체
- ⑤ 기타()

2. 귀하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① 주거공간(현물) 지원: 회사 기숙사, 임대주택 등
- ② 임대료(현금) 지원: 주거급여 등
- ③ 금융 지원: 주택 구입자금 · 전세자금 대출 등
- ④ 주택 개량 보수(수리) 지원
- ⑤ 주택 관련 정보제공, 상담, 계약 관련 지원(통역 서비스 등)
- ⑥ 기타 ()
- ⑦ 지원 필요 없음

3. 귀하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에 대해 응답하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 독립된 주거공간(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2) 같은 국가 인종끼리만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지자체나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

5. 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IV. 배경 문항

SQ1. 귀하의 국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국 국적(중국 동포 등) 50%, 그 외 국적(50%

SQL2. 귀하의 고용 상태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① 상시 근로자 ② 단기(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③ 기타 ()

SQ3. 귀하의 월평균 총 소득(근로 및 사업·재산 소득 등 포함)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③ 200만원 초과에서 300만원 이하 ④ 300만원 초과에서 400만원 이하
⑤ 4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이하 ⑥ 500만원 이상

※ **※ SQ4. 학력(응답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규 교육과정 또는 동등한 자격 기관의 졸업 기준으로 학력을 판정**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⑥ 무학

SQ5. 현재 당신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 ① E-9(비전문취업) ② H-2(방문취업) ③ E-1~E-7(전문인력)
④ D-2, D-4-1, D-4-7(유학생) ⑤ F-4(재외동포) ⑥ 여행비자
⑦ F-5(영주) ⑧ F-6(결혼이민) ⑨ 기타() ⑩ 해당 없음

SQ6. 현재 근무하는 사업체 유형

*산업단지 대상이므로 제조업(100%) 기준으로 대상자 한정